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 박영호 · 허문영 · 남궁영 · 전재성 · 이수훈 · 장의관 · 강동완 외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경남대학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박영호·허문영·남궁영·전재성·이수훈·장의관·강동완 외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경남대학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7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양동문화사 (02-2272-1767)
인 쇄 처 양동문화사

ISBN 978-89-8479-593-8 93340
가 격 ₩9,00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 방안	통일연구원
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 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통일연구원
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1) :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한국의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 포괄적 실리 외교 분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여 인 곤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박 영 호 선임연구위원 허 문 영 선임연구위원 남 궁 영 교수(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전 재 성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이 수 훈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 의 관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 동 완 책임연구원 외
			통일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허 문 영 선임연구위원	배 정 호 선임연구위원 여 인 곤 선임연구위원 전 병 곤 연구위원 홍 우 택 부연구위원
	한국의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남 궁 영 교수	김 형 기 연구위원 이 상 현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 재 성 교수	김 병 로 연구교수 박 장 란 선임연구원 최 진 욱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김 한 성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 수 훈 교수	김 열 수 교수(국방대) 김 근 식 교수(경남대) 이 수 형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목차

C o n t e n t s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박영호, 허문영, 남궁영, 전재성, 이수훈, 장의관, 김동완 외

제1장 서론 / 1

01 연구의 배경	2
02 연구의 목적과 방향	7
03 연구내용 개괄	9
04 연구추진 과정	13

제2장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01 21세기 국제정세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가. 21세기 국제정세의 특징	18
	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성숙한 세계국가	20
02 외교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23
03 안보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26
04 대북·통일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29
05 외교안보통일 전략과 실천방안	가. 기본방향	32
	나. 분야별 전략	33
	다. 시기별 실천방안	36

제3장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01 이명박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특징	가. 비전	42
	나. 4대 추진원칙	43
	다. 5대 중점추진과제	43
	라. 「비핵·개방·3000 구상」(DOT)	43
02 국제적 현안의 실태와 각국 입장	가. 북한의 비핵화	44
	나. 북한의 미사일	46
	다. 북한의 탈북자	47
	라. 남북관계 발전	49
	마. 한반도 평화체제	51
	바. 한반도 통일	52
	사.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54
03 남북관계 현안: 평화의 취약성과 공동체 구축의 지연	가. 한반도 비핵평화구조 공고화 실태	56
	나.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조성 실태	57
	다. 남북사회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실태	58
	라. 소결	58
04 국내적 현안의 실태와 과제	가. 북한관과 대북정책 인식	59
	나. 대북·통일정책 시스템	60
	다. 대주변국자세 실태	62
	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	62
05 대북·통일정책의 실천방안	가. 기본방향	64
	나. 세부 실천방안	65

제 4장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01	서론		70
02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이론적 배경	가. 네트워크 시대의 국제질서 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전략과 협력 네트워크	71 73
03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추진		74
04	주요국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발전	가. 일본: 성숙한 동반자 관계 나. 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다. 러시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라. 동북아 협력네트워크 구축	77 78 79 79
05	신아시아외교 내실화	가. 남아시아 나. ASEAN 다. 대양주 라. 중앙아시아	83 84 85 86
06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가. EU 나. 중동·아프리카 다. 중남미	88 89 91
07	협력 네트워크의 단계적 실천방안		92

제 5장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01 이명박 정부의 외교 비전과 ‘포괄적 실리외교’	가. 포괄적 실리외교의 배경 및 목표 96 나. 포괄적 실리외교의 추진 내용 97 다. 포괄적 실리외교의 추진 상황 98
02 에너지 협력외교의 현황과 평가	가. 현황 99 나. 평가 101 다. 향후 과제 102
03 FTA 체결 현황과 평가	가. 현황 102 나. 평가 103 다. 향후 추진 과제 104
04 기여외교 현황과 평가	가. 현황 104 나. 평가 106 다. 향후 추진 과제 107
05 재외동포 지원외교 현황과 평가	가. 현황 108 나. 평가 109 다. 향후 추진과제: 한국 중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로 110
06 ‘포괄적 실리외교’ 강화방안	가. 기본 방향 110 나. 세부 실천방향 111

제 6장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01 서론	120
02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선진 안보체제’	121

03 군사능력의 현황과 평가	가. 정보·기술 집약형 군사력 건설	123
	나. 무형전력의 공고화	126
	다. 예비전력의 극대화	127
04 국방경영의 현황과 평가		128
05 포괄안보 역량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133
06 대외군사협력의 확대와 발전방향		137
07 선진안보체제 구축방안		138

제7장 결론

01 추진연구의 내용	141
02 협동연구의 종합평가	148

참고문헌 / 15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75

〈표 1-1〉 주요회의 개최 현황	14
〈표 2-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23
〈표 5-1〉 에너지 수입의존도	100
〈표 7-1〉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구조	145
〈표 7-2〉 포괄적 실리외교의 장·단기 목표 구분	146
〈표 7-3〉 외교통일안보 전략과 실천방안	149

제1장

서론

이 문헌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1세기 세계화의 가장 현저한 특성은 세계를 지역적으로 분할하던 시간과 거리의 간극을 축소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국가들 간의 긴밀한 상호연계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상호연계 구조의 가속화는 국가 간 접촉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하는 한편 접촉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는 상호연계 구조의 증진이 초래하는 결과이자 원인을 구성한다. 이러한 상호연계 구조는 국가들에게 유익한 상황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긴밀한 상호연계 구조 하에서 각 국가는 자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정책영역의 현저한 축소에 직면할 수 있다. 21세기의 상호연계 구조는 근대 이후 정착되어 온 국민국가의 주권개념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한다. 국가통제를 해체시키는 환경과 자신의 통제력을 수호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상호교차하는 가운데 국가의 통제 영역과 역량은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통제가 어떻게 개진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단지 국가의 통제업무가 점차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상호연계 구조의 새로운 시대환경 속에서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들에 대응하며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전개하는 현대 국가들의 어려움을 굳이 반복하여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의 경우에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분단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외교 및 안보 정책영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남북관계 및 통일의 이슈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의 복잡한 이해 조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자국 안보의 확보와 분단 문제의 해결이라는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추진이 특별한 통찰력과 고민을 요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가 위치하는 동북아 지역은 냉전의 종식과 양극체제의 붕괴, 그리고 9·11테러사건 이후의 반테러리즘 캠페인 등 세계정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여파로부터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지역이다. 패권적 지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범세계적 전략, 중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부상, 일본의 정상국가화 시도, 러시아의 국력 회복 등은 동북아 지역 내의 세력전이를 추동하는 요인을 구성하면서 동북아의 복잡한 정치현황을 배태한다. 동북아 정치현황의 복잡성을 추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간 상호연계 구조의 심화이다. 냉전의 해체이후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던 이념적 장벽이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교류와 협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혁신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은 동북아 정치의 빠른 전이를 이끄는 요인이자 동북아 정치의 복잡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정책의 설정은 우리 정책결정자들의 중심 과제이다. 이중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우선적 과제를 구성할 것이다. 탈냉전이후 동서대립의 구도가 와해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 동북아 지역 이해가 전이의 과정을 밟는 상황 속에서도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은 한미 간의 결속체제를 긴밀하게 존속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간 한미 양국의 관심은 주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공동안보 협력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집중하여 왔다. 대신 탈냉전기의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한미동맹의 목적 및 내용의 근본적 재조정 등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작업 등은 여전히 부진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외교정책의 초점이 세계 패권의 유지와 자국 안보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유연성과 정책적 대응의 신속성이 저해될 여지는 상존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우선적 목표가 패권 도전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국 안보의 위협주체인 북한의 핵문제에 머무는 한 한미관계의 구조적 재조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광범위한 교류협력의 확대는 한국의 외교 정책기조에 총체적 조정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우리와의 수출입 교역

총액에서 1위로 부상한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및 통상정책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미국일변도의 외교정책기조에 대한 근본적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착화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도 북한의 오랜 지원 국이자 동맹국인 중국과의 효율적 공조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G2 국가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 외교정책의 미래 기조를 설정하는 과제는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일본과의 우호적 협력관계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러시아와의 공조 등을 확대시키는 외교 방안에 대한 고민도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정치, 외교, 군사 등 이른바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영역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보건 등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영역에서 이들 역내 국가들과의 다각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의 모색은 당위적 과제를 구성한다. 물론 전세계적 상호연계성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외교의 범위가 미국이나 동북아 역내 국가들로 한정될 수는 없다. 동아시아 및 범아시아, 나아가서 유럽, 오세아니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들의 국가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도 필수적 과제를 구성한다.

한편, 탈냉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동서 양진영간의 이념적 갈등의 그늘에 숨어있던 다양한 이슈들이 갈등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도 주목할 사안이다. 경제영역의 경우, 상호연계되고 통합된 국제경제 환경에서 경쟁을 추구하는 현대국가들은 협업과 공조의 경제적 혜택만큼이나 외부적 충격과 침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용을 떠안고 있다. 국제적 에너지 공급의 고질적 불안정성이나 다국적 기업, 헤지펀드 등 국가가 제어할 수 없는 국제시장 변수들의 자율성 확대 등 대외적 변수들의 위협에 현대국가들은 자신의 경제들을 손쉽게 노출시키고 있다.

국경의 한계를 넘나드는 환경과 보건문제도 현대 국가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이슈의 경우 환경문제 발생국과 피해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법의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테러리즘의 경우 대량살상무기(WMD)의 확대 추세 속에서 근년 들어 더욱 민감한 세계안보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테러리즘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위협이 일반화되면서 테러리즘의

대응책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핵, 미사일, 생물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및 거래 등을 통제하는 국제적 공조 조치들이 확대되고 있다. 인종 및 종교에서 비롯되는 갈등 요소들도 국제사회 내에 다양하게 분출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는 혼재된 분쟁들을 야기하고 있다. 문화 간의 갈등 또한 극한적 이념대립의 구도를 벗어난 탈냉전의 시기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테러, 무기밀매, 밀수, 마약, 위조지폐, 자금세탁, 여권위조 등 국제범죄가 범세계적으로 연결고리를 확대하면서 현대 국가들의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是我们的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외교안보적 당면과제를 형성하고 있다.

상호연계성의 확대는 현대 국가의 안보환경에도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긴밀한 연계구조 하에서 국가나 개인들은 타국이나 타인들로부터의 위협에 손쉽게 노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보위협주체와 위협대상을 잇는 위협의 연계구조 또한 긴밀화되고 직접화되는 환경에서 현대 국가와 개인들은 안보위협채널의 대규모 확대와 위협비용의 현저한 감소로부터 유발되는 증대된 안보위협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위협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할 수 있는 상호취약성의 환경이 폭넓게 조성되기 때문이다. 안보위협의 전달경로가 상호연계성을 통해 네트워크화되면서 과거에는 고립되어 있던 개인들에게까지 위협이 전달되는 등 현대 국가와 개인은 확대된 안보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의 전통적 위협요인들이 존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요인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란과 외환의 방지 등 국가의 존속에 안보의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현대에 들어서서는 경제, 사회, 문화, 범죄, 환경, 보건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위협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안보위협의 성격과 내용을 복잡화시키고 있다.

현대 국가의 안보위협은 위협분야의 확대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협주체와 위협대상의 확대도 현대 국가들이 대처해야 할 안보의 새로운 특성이다. 국가를 행위주체로 한 국제관계가 이완되면서 초국가적 또는 하부국가적 국제관계 행위자들이 국가안보 위협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사회는 초국가주체나 국가하위주체 등 비국가주체들이 때로는 일반 국가들을 능가할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관계의 행위자로 등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국가주체들의 영향력 증대는 영토와 국경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통해 독립적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주권체로서의 위상을 주창해 온 국가들간의 긴장적 경쟁관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 반면, 비국가주체들의 부상은 이들 국가들에게 다양한 안보위협을 수행할 주체들의 급격한 수적 확대를 의미한다.

현대 국가는 안보위협의 수단과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통적 안보위협이 군사력, 경제력 등 상대에게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위협을 부과하는 것이었다면 현대 사회의 안보위협은 간접적이고 회유적인 연성권력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특정 강대국에만 허용되던 위협의 수단들이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들에게까지 보편화되면서 효과적 위협의 전선(front of effective threats)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협의 수단과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현대 국가와 개인 모두 취약한 안보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안보위협의 다면적 변화에 직면하여 현대국가는 기존의 안보 시각을 총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한 및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효과적 군사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추가적 안보 과제를 안고 있다. 미진한 군사역량을 보완할 대외적 군사협력의 방안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안보 전략 및 실천적 방안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우리에게 요구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남북관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형성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발전의 과정을 밟아왔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과반세기 동안의 침체한 대결의식과 적대감도 서서히 이완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 대화 및 협력에 꾸준한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화의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 이는 남북관계의 안정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은 여전히 불안이 내재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아문제 등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미결 과제로 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지는 정책결정자의 중대한 고민거리를 구성하고 있다.

외교, 안보 및 통일 영역의 변화된 환경과 새로이 생성되는 현안들에 대응하는 역량의 확보는 선진 한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여 이명박 정부는 외교, 안보 및 통일 분야의 미래지향적 국정지표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 지표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적 네트워크 외교와 포괄적 실리외교에 중점을 둔 외교정책,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를 지향하는 안보정책,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지향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성숙한 세계국가’의 구상은 그간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논의들을 통해 내용의 내실화를 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논의들은 이러한 구상을 어떻게 실천적 정책방안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함을 노정시키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이번 협동연구는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의 이론적 내실화를 추가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외교·안보 및 통일 정책의 분야별 특성에 부응하는 구체적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의 강구에 역점을 둬으로써 타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본 협동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현재 및 미래 과제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더불어 이들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중·장기적 전략 및 세부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기본틀은 정부 출범 1년 후인 시점에서 청와대가 발간한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에 정리되고 있다.¹⁾ 이명박 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국제사회와의 능동적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격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 ‘성숙한 세계국가’는 세 개의 핵심적 가치를 표방한다. 민족성 폐쇄성과 배타성의 민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열린 사고

1)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2009)

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이익을 도모하며 정의롭고 평화롭게 공영하는 세계를 구현하는 ‘정의와 평화’, ‘공동 번영’ 및 ‘세계주의’의 가치를 옹호한다. 그리고 이같은 가치 옹호의 효율적 실천원칙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수용한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허구적 이상의 추구나 편협한 이념과 가치를 갖대려 한 외교적 관행을 탈피하고, 한반도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이해를 토대로, 실천가능한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목표와 전략의 수용을 통해 비용 대비 최대의 정책효과를 산출하는데 주력한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활동 등을 통해 한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 한국에 적대적인 국가형성의 방지, 한국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의 조성, 글로벌 문제에서의 한국의 리더십 확대 등을 도모하는 전략을 수행한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 과제로는 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네트워크 외교와 포괄적 실리외교, 안보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선진안보체제, 남북분야에서의 상생·공영의 남북관계가 포함된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는 21세기적 환경에 부합하는 한미관계의 발전적 공고화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들과의 협력체제 구축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을 벗어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교류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에도 관심을 갖는다. 한편, 포괄적 실리외교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협력외교의 강화와 FTA의 다변화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및 국제경제협력의 활성화, 기여외교의 확대를 통한 연성권력의 증대 및 한국의 대외 리더십 확보 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안보분야의 과제는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의 확립으로 요약된다. 하부 과제로는 선진 군사능력의 확충, 국방경영의 효율화, 대외 군사협력의 확대, 포괄적 안보역량 구비 등이 제시된다. 반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및 행복공동체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토대로 한다. 하부 과제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북핵문제의 해결,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 인도적 문제의 협력 등을 포함한다.

본 협동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영역 설정 및 분야별 주요 과제 선정의 기준을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제시한 개념틀에 개략적으로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물론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이슈들은

개념들에 과도하게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협동연구의 초점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 전략과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맞추어진다. 협동연구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분야별 연구들은 단기(2011~2012), 중기(2013~2017) 및 장기(2018년 이후)로 구분하여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삼분법적 시기 구분이 지니는 임의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은 분야별 실천방안들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며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이 각기 독자적 영역을 형성하기보다는 상호 연계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영역 사이의 실천방안들 간의 상충성을 줄이고 정책적 효율화를 위한 조율을 위해서도 삼분법적 시기 구분에 따른 논의는 유용성을 지닐 것이다.

3. 연구내용 개괄

본 협동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추진 환경 및 기본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총론적 검토를 수행하는 한 편의 연구와,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포괄적 실리 외교 분야, 안보정책 분야 및 대북통일정책 분야 내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네 편의 분야별 연구로 구성된다.

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에 대한 총론적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한 후,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추진 환경을 각 분야별로 검토한다. ‘성숙한 세계국가’는 국력의 제고를 꾀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기치이다. 국력의 제고는 단순 실리의 확보에 주력하는 대외정책 목표와는 차별화를 꾀한다. 이는 성숙한 리더십을 발현함으로써 세계질서의 진정한 주도그룹 속으로 한국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 ‘성숙한 세계국가’는 단순한 외침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발전 계획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며, 우리의 대내외적 가용자원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선행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작업의 차원에서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추진 환경에 대한 검토를 먼저 수행한다. 뒤이어 네 편의 분야별 연구들에서 논의될 내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략과 실천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 정리한다. 분야별 실천방안은 단기, 중기 및 장기로 구분되어 정리된다.

나.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이 연구는 협력 네트워크 외교를 협력 외교와 네트워크 외교의 두 차원을 포괄하는 외교로 개념화한다. 협력 외교는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를 지닌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간의 소통, 교류 및 협력의 행위로 특징화 된다. 반면, 네트워크 외교는 “이로운 협력을 가능케 하도록 서로 연결된 행위자들의 집합”에 특정국가가 자신을 연계시킴으로써 외교적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네트워크 외교에서 외교력의 근원은 중요한 연결을 가능한 한 많이 실현시키는 능력으로 규정된다. 역으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배제될수록 국가의 외교적 역량은 한정된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외교의 개념 정립을 위한 배경 이론의 논의를 우선적으로 수행한 후,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수행 과제를 주요 국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범위는 21세기적 한미 전략동맹의 구축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범아시아적 네트워크 형성, 나아가서 유럽, 아랍,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확장된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 상황의 극복, 경제 및 통상 문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국제테러리즘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실천방안을 타진한다. 세부 실천방안은 여타 연구들과 같이 단기, 중기 및 장기의 시기별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다.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포괄적 실리외교는 외교 대상과 이슈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국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실리적 외교를 규정한다. 포괄적 실리외교는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는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범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외교 대상지역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포괄적 실리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핵심적인 군사적,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환경, 범죄, 보건 등과 연계된 국익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등 연성 권력적 요소들까지 외교이슈의 범위 안에 확장적으로 포함시킨다. 한편 실리외교는 냉전적 이념들에 구속된 이념외교를 지양할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이유 등으로 과도하게 단기적 이익에 몰입하여 중·장기적 국익을 저해하는 외교 행태를 거부한다.

이 연구는 포괄적 실리외교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시킨 후, 네 개의 핵심 외교 현안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을 논의한다. 네 개의 현안은 에너지 외교, FTA 체결 외교, 기여외교 및 재외동포 지원외교를 포함한다. 뒤이어 이 연구는 포괄적 실리외교의 강화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단기, 중기 및 장기로 나누어 논의한다.

라.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명박 정부는 ‘선진 안보체제의 구축’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 ‘선진 안보체제’는 한국의 방위 역량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략적 환경 변화와 다양한 세계 안보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장시켜서 자주적 국방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진 안보체제’의 구현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4대 중점 과제는 선진 군사능력의 확충, 국방경영의 효율화, 대외 군사협력의 확대, 포괄안보 분야의 역량 구비 등이다.

선진 군사능력의 확충은 정보·기술 집약형 군구조의 추구 등 군전력 증강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들을 요구한다. 국방경영의 효율화는 유사 중복 조직의 통·폐합,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 민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조직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대외 군사협력의 확대는 한미간 군사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모색과 더불어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 대화 및 협력 관계 강화, 나아가서 다자간 안보대화과 국제협력체제에의 적극 참여 등을

도모한다. 한편, 포괄안보 분야의 역량 구비는 국제테러·마약·해적행위·환경, 보건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의 제고를 주문한다.

이 연구는 상기 제시된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 후,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선진 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한 세부적 실천 방안들을 강구한다.

마.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및 행복공동체의 3대 공동체를 지향한다. 평화공동체가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경제공동체는 남북한 양자가 경제적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의 공동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행복공동체는 인도적 문제 해결에서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의 추진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3대 공동체의 실현과 관련된 다각적 남북관계 및 통일의 이슈들을 분석적으로 논의한다. 연구는 우선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7개의 이슈들을 선별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이들 이슈들에 대한 국가 간의 상이한 입장 차이를 분석한다. 선별된 7개 이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북한의 미사일 문제, 탈북자 문제, 남북관계 발전 이슈, 한반도 평화체제 이슈, 한반도 통일 문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이슈로 구성된다. 이어서 연구는 3대 공동체 구축과 관련된 실태를 남북관계를 위주로 분석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대북정책 시스템 등 소수의 국내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수행한다. 그리고 앞서 진행된 논의의 토대 위에서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적 실천방안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강구한다.

4. 연구추진 과정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 추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개발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즉, 북핵문제 등에 따른 가변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외교·안보·통일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연구의 성격을 감안하여, 본 연구팀은 청와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정책담당자들과의 지속적인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안의 구체성 및 실천가능성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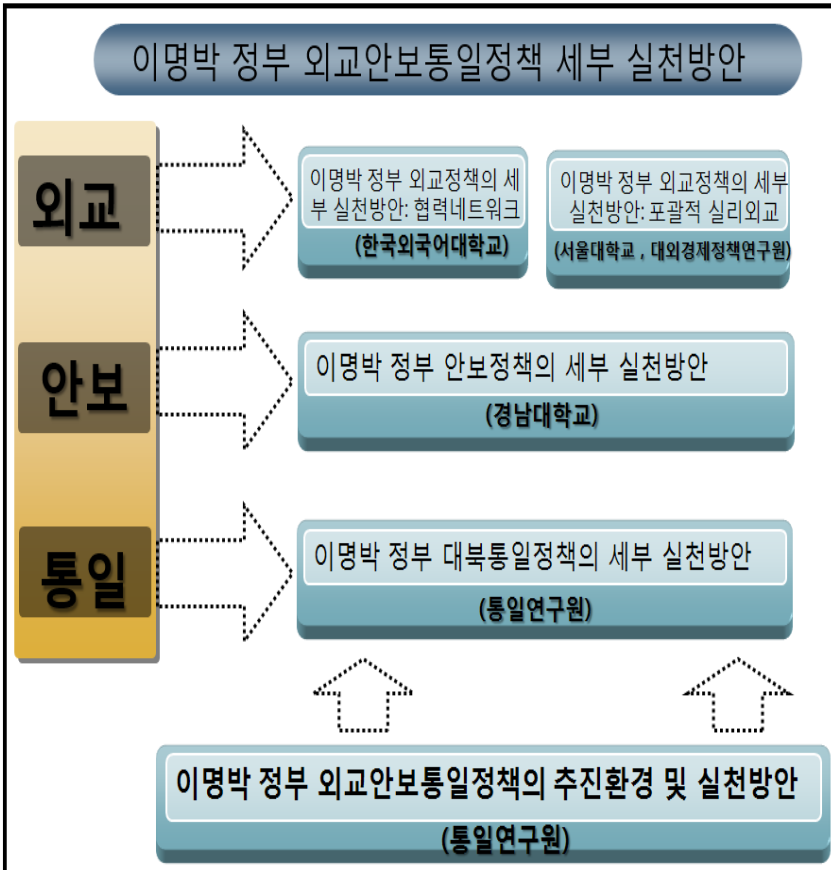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는 학제 간 연구와 협동연구의 장점을 살리고자 각 주제별 또는 총괄적으로 관련 행위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간담회, 워크숍,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세부 주제별로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및 워크숍을 15차례 이상씩 개최하였다. 그리고 총괄적으로도 자문회의, 사업계획발표회, 총괄책임자와 세부과제 참여자간 간담회, 공동연구진 전체워크숍, 중간발표회, 최종발표회 등 총 28회 이상의 모임을 가져 회의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분야별 전문기관 간 유기적 연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진정한 “협동연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대주제와 분야별 세부주제간 유기적 연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진 전체회의와 워크숍을 수차례 개최하여 상호간 인식을 공유하였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1차례씩 총괄책임자와 세부과제 연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 관한 방향 및 추진방식을 논의하고 연구방향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아래 <표 1-1> 참조).

<표 1-1> 주요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시	회의명	주요내용
전반기	3.24	계획안 발표회	2010년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 협동연구 계획안 발표회
	3.30	자문회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환경 및 전략
	4.6	간담회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4.20	간담회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 환경
	5.6	간담회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 추진방향
	5.12	자문회의	한반도 통일환경과 통일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5.18	자문회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추진방향
	5.27	자문회의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 전략과 개선방안
	6.17	간담회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대북차원 세부 실천방안
	6.22	자문회의	최근 북한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7.26	총괄책임자와 세부팀장 간 간담회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추진방안
	6.25	간담회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6.28	간담회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후반기	8.18	자문회의	이명박 정부 외교환경과 외교정책 방향
	8.26	중간보고	외교안보통일정책 협동연구의 세부과제별 중간보고 및 향후 연구방향 설정
	8.27	자문회의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9.8	간담회	최근 북한 동향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천방안
	9.17	간담회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30	자문회의	탈북자 자문회의를 통한 북한의 최근 상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안 마련
	10.4	총괄책임자와 세부팀장 간 간담회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추진방안
	10.6	자문회의	탈북자를 통해서 본 최근 북한상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안
	10.26	자문회의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추진과정과 환경
	10.28	워크숍	이명박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세부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환경 여건
	11.2	최종보고	2010년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 협동연구의 세부 과제별 최종발표

본 협동연구는 통일연구원이 기본계획서와 이에 따른 연구분야 및 세부연구주제를 확정하고, 엄정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 공정성, 적합성, 주제간 유기적 연계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통일연구원을 총괄연구기관으로 하여 2개의 세부과제는 통일연구원이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세부과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외부기관으로서 경남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협력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협동연구망을 구축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및 참여 연구기관



끝으로 본 총괄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이라는 대주제의 전체방향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분야별로 추진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연구결과물로 재구성한 협동연구 총괄보고서이다.

제2장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제2장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1. 21세기 국제정세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가. 21세기 국제정세의 특징

21세기 국제질서는 미국의 상대적 힘이 약화되면서 한 개의 초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아닌 여러 개의 강국이 존재하는 다자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 국제적인 의제도 전통적인 안보문제 이외에 새로운 의제들이 등장해 있다. 물론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²⁾ 그러나 냉전 시대처럼 정형화된 구조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혜택만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으며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요인의 발생으로 예측이 어려운 복잡체계(Complex System)의 시대이다. 복잡체계의 세계는 모든 사물이 비선형적으로 움직여서 정형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며, 따라서 항상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창조적 사고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이다.

21세기의 동북아질서는 세계적 차원에서처럼 냉전시기와는 구별되지만, 그 질서를 규정하는 새로운 구조 틀이나 규범이 형성된 상태는 아니다. 사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4국은 상대적 위상의 변동은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한국은 신장된 정치·경제능력을 기반으로 유력한 중견국가로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질서 창출을 위해 상호 관계를 진전시켜오고 있다. 오직 북한만이 냉전시대의 굴레로부터 제대

* 본 내용은 박영호·전성훈·조민·최수연,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10-15-02)』 연구를 요약한 것임.

2)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인터뷰, 『조선일보』, 2010년 8월 14~15일.

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동서독과 남북예멘 등 다른 분단국들은 이미 1990년대에 통일 국가를 달성하고 특히 독일은 2010년 통일 20주년을 맞으면서 세계의 4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고 있다. 북핵 문제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의 첫 10년 동안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점점 더 남북관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아래서 이러한 성향이 점차 두드러졌다. 또 두 정부는 한·미동맹관계를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미 관계를 과거로부터의 부정적인 유산으로 인식하고 그에 입각한 동맹의 재조정을 추진함으로써 한·미 갈등을 유발하였다.

한편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영전략인 ‘선군정치’는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체적 동원과 체제 단속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핵무기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북한식 ‘공세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와 결부되었다. ‘선군정치’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맞서는 ‘반제자주정치’의 명분으로 설명되며, 대내적으로는 ‘3대 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주는 (북한식) 사회주의 정치’이자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체제 유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라고 설명된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이러한 논리에 지배받는 한,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제한된 교류·협력 발전을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북한체제가 중국이나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양상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변화는 역시 장기간의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군사안보차원에서 속전속결전략이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로 남한의 방어태세에 위협을 주는 군사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권력과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기존 권력과 이익을 계속 향유할 수 있다고 북한 지도부와 핵심엘리트들이 판단하는 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물론 체제 운영 차원에서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보다 본질적으로는 1인 지배 전체주

의 독재체제의 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피폐한 경제상황 속에서 북한지도부와 당국이 군사모험노선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북한은 이제 김일성-김정일 부자로 이어진 세습 장기 독재를 김정일-김정은 부자로 잇는, 즉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 이식된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를 현대판 봉건체제로 변질시킨 북한의 독재자는 이제 시대를 역행하는 체제를 뿌리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³⁾: 성숙한 세계국가⁴⁾

한반도 차원에서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2008년 2월 5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정책의 위임을 받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그 이전 정부에서 나타난 경제적 실패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갈등의 심화, 최고정책결정자의 리더십에 대한 실망 등 복합적인 요소의 반영이었다. 한국의 역사발전 관점에서 보면 정치사회적 다수세력의 소수세력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비전으로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선정하였다. 선진 일류국가의 국가비전은 지난 60년의 발전과정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단순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한민국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 속의 국제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도약하는 문명국가를 만들자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인간 중심의 보편적 가치 확산 등 문명사적 전환기의 복합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도전적 과제를 튼튼하게 밀받침할 수 있도록 당대의 국민적

- 3)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에 발간한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책자에서 ‘외교안보의 비전’ 용어를 외교와 안보, 그리고 통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 4) 시대정신, 국가비전, 행동규범, 국정목표, 5대 국정지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정과제’ 항목, 그리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2008.2.5)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구상은 정부 출범 1년 후 청와대가 발간한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2009.3)으로 정리되었다.

요구를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과제로 新성장동력 발굴, 민생경제 회복, 지역적 이념적 분열의 극복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기 국가비전으로 선정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의 내용은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현대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한 행동규범으로는 ‘창조적 실용주의’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창조적 실용주의는 ‘실질적인 성과 중시, 현실적인 적합성, 새로운 목표와 방법의 창안, 체계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을 구성요소로 한다.

이러한 국가비전과 행동규범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의 국정목표로서 ‘신발전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5대 국정지표로 내걸었다. 앞의 4개 국정지표가 국내적 차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는 대외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즉 외교안보의 비전으로 제시된 것이다.

‘성숙한 세계국가’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국정지표이다.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국가의 모습으로서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나라’ 즉 연성강국(Soft Strong Power)을 제시하였다. 성숙한 세계국가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로서는 정의와 평화, 공동번영, 세계주의(global mind)를 설정하였다.⁵⁾ 정의와 평화는 “폐쇄적 민족주의, 인기 영합주의에 의한 대외정책은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개방된 사고를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하여 “한민족과 국제사회가 함께 이익을 누리고 공감하는 외교정책”으로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공동번영은 국가 간 관계가 긴밀해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타국으로부터의 적대적 정책을 예방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협력 관계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세계주의는 “국제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국제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원칙으로서는 ‘창조적 실용주의’가 제시되었다. 창조적 실용주의란, ① 주변 환경에 대한 냉철하고 치밀

5) 위의 책, pp. 13~14.

한 평가 아래, ② 실천 가능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 ③ 투입한 노력과 비용에 대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행동 규범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접근 방안으로 국민통합 도모, 실용적 성과 중시, 국제적 협력이 제시되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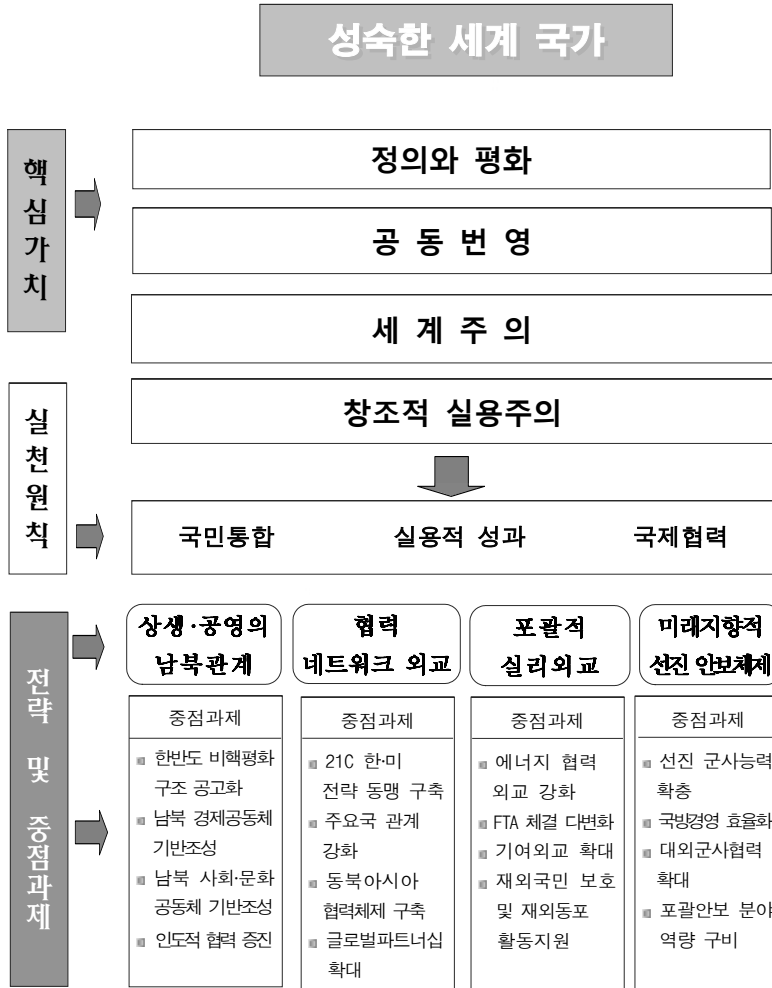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제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 성숙한 세계국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전개’, ‘굳건한 선진안보체제 구축’, ‘품격 있고 존중받는 국가 건설’ 등 4개의 전략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각각 5개의 과제를 마련하였다.⁷⁾ 이러한 전략과 과제들은 특히 외교·안보 및 통일과 관련하여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협력네트워크 외교, 포괄적 실리외교, 미래지향적 선진안보체제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그 아래에 각각 4개씩의 중점과제로 재정리되었다(<표 2-1 참조>).⁸⁾

6) 위의 책, pp. 14~15.

7)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2008), pp. 81~98.

8)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2009.3), p. 11 도표 참조.

<표 2-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출처: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2009.3), p. 11.

2. 외교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재편 측면에서 21세기의 초입 단계인 현재,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미국, 중국, EU가 상호 견제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과거의 소비에트 블록, 중동, 그리

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 이른바 ‘제2세계’ 국가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이 전개되고 있다. ‘제2세계’의 미래가 이들 세 중심세력과 어떻게 관련을 맺느냐에 달려 있다면, 세 주도세력의 미래도 ‘제2세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구도 속에서 미국은 경제적 쇠퇴와 국제적 영향력의 퇴조로 미래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⁹⁾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이른바 ‘G-2’로 불리는 미·중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중심의 군사적 단극 체제 하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과거 60여 년 동안 세계의 질서와 안보를 유지해왔던 유일패권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극체제 아래서 미국의 역할과 리더십 형태의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아주 빠른 템포로 세계대국으로 부상 중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21세기 한반도는 또 다시 중화제국의 패권 아래로 떨어질지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은 국가존속의 한계 상황에 내몰려 전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령체제 하에서는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합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스런 국가’로 상당기간 존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체제유지를 위해 스스로 친중정권을 창출하거나 실질적인 보호국으로서의 존립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변화된다면, 분단국가 한국은 미국·일본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우리 외교통상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 목표로 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② 경제를 살리는 외교, ③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설정하였다.

청와대는 2009년 3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전략을 체계화한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외교분야 전략목표를 협력네트워크 외교와 포괄적 실리외교로 확장하였다. 협력네트워크 외교 확대를 위한 정책기조는 21세기 한·미

9) P. Khana, *The Second World: Empires and Influence in the New Global Order*, 2008.

전략동맹 구축, 주요국 관계 강화, 동북아시아 협력체제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이다. 포괄적 실리외교 지향을 위한 정책기조는 에너지 협력외교의 강화, FTA 체결의 다변화 추진, 기여외교의 확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이다.

외교통상부는 12월 31일 ‘2009년 업무평가’를 통해 주요 성과로는 신아시아외교 출범(한·ASEAN 특별 정상회의 개최,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아·대양주 및 중앙아시아 방문),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2010 G20 정상회의 유치, EU 및 인도와의 FTA 체결, UAE 원전 수주 활동 지원),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동맹 미래비전 채택, 안보협력 및 전략동맹 기반 강화),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한·중·일 정상회의 제도화, 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미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국력에 걸맞는 기여외교 실천, 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이라는 세 분야를 들었다.¹⁰⁾

상기와 같은 ‘2009년 업무평가’를 기초로 우리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외교 구현을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중점추진 과제를 정상외교 지평 확대,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설정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북핵문제는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미간에는 외교·국방 당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속해야 하며, 양국의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한 대북 억지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체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비도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내실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보 차원뿐 아니라 각 분야의 충실한 추진을 통해 포괄적 협력관계가 실질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은 FTA 협정의 비준을 위한 미국 내의 여론 환기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체되고 있는 비준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10) 외교통상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2010년 업무계획』 (2009.12.31), pp. 1~2.

받기 위한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는 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국과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외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에 나타난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한·중 양국관계에서 정치·군사적 측면이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한·중 통상관계가 중·북 통상관계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한·중 사이에는 굳건한 정치·군사적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잠재적 갈등요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한반도문제의 해결이나 지원협력, 지역의 공동 경제 번영 등의 실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 간 안보협력 활성화, 범아시아 협력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차원의 각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포괄적 실리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안보 중심 외교와 중진국 포괄외교의 조합, 외교대상 범위의 체계화 및 지역 간 외교전략의 연계, 종합적 에너지 외교정책 수립, 효율적인 FTA 이행, ODA와 연계외교, 실용적 국익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지지 확보, 외교관련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역할 배분과 협력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 즉 우리 정부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포괄적 실리외교를 강화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자 및 다자 관계만을 고려하는 외교가 아니라, 지역별·분야별·사안별·행위자별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의 실용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안보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한국의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변수는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인식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비핵·개방·3,000 구상”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09년 9월에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그랜드 바겐’을 제시하며 북한에 대해 핵포기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 핵이 당면한 안보위협이라면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위협요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동북아의 장래와 통일한국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국제안보 환경과 특히 주변 4강의 안보정책은 한국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이라는 사실임이 분명하다. 주변 4강의 안보정책은 북한 핵문제와 복합적으로 연동되어서 새로운 안보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 기초는 국방부가 2008년 12월에 발간한 ‘2008 국방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¹¹⁾ 국방백서는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미래 잠재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WMD 개발과 증강,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을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둘째, ‘평화통일 뒷받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하여 평화적인 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셋째,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는 국력과 국방역량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국방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방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8대 국방정책 기초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일이다. 둘째, 한·미 군사동맹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양국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 및 동맹의

11)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pp. 36~41.

정통성을 바탕으로 군사안보 협력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대·심화시키고,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며, 양국 간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시킨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를 구축한다. 셋째, 선진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분단 상황을 넘어 통일 이후까지를 지향하는 군의 미래 모습을 투사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하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한다. 넷째,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조 창출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섯째, 맡은 바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다. 여섯째, 실용적인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곱째,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병영 환경의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일이다. 여덟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하는 일이다.

한국의 안보정책 추진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범세계적 차원에서 WMD 확산과 테러가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WMD 확산 행태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 4강의 안보정책 역시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며 제한된 자원으로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놓치려 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한 푸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당분간은 경제성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내정의 불안과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을 우려하면서 공세적인 안보정책과 자체 방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가 첨예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열악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소위 비대칭 전력에 대한 선택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대남 위협을 구체화하면서,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라는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자행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북한군이 지속적으로 DMZ 인근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예외의 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물론 북한의 두 차례 걸친 핵실험으로 현실화된 핵 위협, 화학무기 및 세균무기

위협도 한국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안보위협이다.

이런 안보위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①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 구축’이라는 안보 전략목표 제시, ② ‘국방개혁 2020’의 보완·발전, ③ 천안함 사태이후의 대응을 통해 효율적 안보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평가와 안보역량 점검 및 대비태세 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보완조치가 더욱 취해져야 할 것이다.

4. 대북·통일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다짐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정부의 통일기반 구축방안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변영권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자는 것이다.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3개 공동체, 즉,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행복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이런 핵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어렵고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공동체 형성은 그동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과거와 같은 우리의 일방적인 지원 성격의 남북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쌍방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진했던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을 상호·결합하는 방식으로 경제공동체로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목표에는 남북한 주민이 모두 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한반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공동체를 실현도

포함되어 있다. 행복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산가족,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이 우선 해결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추진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추진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그리고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내세우고 있다.¹²⁾

현재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것은 1994년 8.15 광복절 경축 기념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11)을 계승·발전시켜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자주·평화·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연합단계 진입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남북 사이의 신뢰회복과 적대관계 청산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 통일방안은 기능주의적 시각에 기초해 경제·사회·문화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통합을 토대로 정치 분야에서의 통합을 도출하고자 한다.¹³⁾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는 기능주의 통합론이 가지는 문제로는 교류협력의 확산효과(spill-over effect)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기능주의 관점에서 통일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단계 이행에 대한 기준 및 조건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셋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넷째, 공동체 형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 다섯째, 통일방안의 2단계에 등장하는 남북연합은 그 성격이 모호하고 운영상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그 성격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남북연합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¹⁴⁾

12) 통일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http://www.unikorea.go.kr>.

13) 박영호 외, 『남북연합 하에서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86.

14) 남북연합을 체제연합으로 해석하고 체제연합을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형태로 보는 견해, 연방제보다 국가연합에 가깝지만 특수한 형태로서 영연방과에 가깝다는 견해, 기본적으로 국가연합과 유

또한 남북연합은 남북한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우 비현실적이다. 남북한의 인구,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은 우리의 통일방안이 태동한 시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었다. 북한 핵문제에 따르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참여한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고립과 붕괴를 자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거의 유일하게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한만의 의지와 협력 증대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통일방안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통일에 대한 주변 관련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구체적이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안들은 보완되어야 한다. 통일방안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과정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 주목해 이 단계의 완성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에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하였다. 3대 공동체는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이다. 정부는 3대 공동체는 단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상호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로 출발해서 평화공동체의 진전과 함께 경제공동체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발전되면 그것은 동시에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위해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5. 외교안보통일 전략과 실천방안

우리 정부가 향후 설정해야 할 외교안보통일의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해야 할 분야별 전략과 단기·중기·장기의 시기별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사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김학준, "민족공동체와 남북한 체제연합 연구: 제6공화정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배경," 『통일문제연구』, 제1권 3호(1989년 가을), pp.28~32; 장명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 법적 체계화연구』, (서울: 통일원, 1989), pp. 24~34; 장윤수, "남북연합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한민족공동체 형성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원, 1992), pp. 111~115.

다.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대체적으로 종료되는 2012년 말까지를 단기, 차기정부 집권기간인 2013~2017년을 중기, 2018년 이후를 장기로 구분하였다.

가. 기본방향

(1) 단기: 4대 전략목표 견지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국제정세, 우리나라의 외교정책과 안보정책 및 대북·통일정책의 추진환경·목표·정책기조와 주요 정책내용을 재검토하고 분석·평가하였다. 이 결과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다차원 실용외교의 필요성, 안보정책 분야에서는 효율적 안보역량의 확충 필요성, 그리고 대북·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약 2년간의 임기 잔여기간 동안 4대 전략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시기별 실천방안 중 단기적 실천방안에서 제시되는 사안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중장기: G7 진입과 통일 달성

이명박 정부는 한국정치에서 군사권위주의 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한 이후 네 번째의 정부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 기간은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탈냉전의 시대와 병행한다. 탈냉전시대의 격변하는 국제정치경제 및 안보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냉전구조의 영향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경제력의 성장에 부응하는 국가위상의 제고와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적응, 자주적 안보 역량의 강화, 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외교안보와 대북(통일) 정책의 비전으로 삼았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단임 5년으로서 특정 정부가 외교안보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도 구체적인 전략 목표와 과제들을 다 실현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물론 어떤 전략 목표와 과제들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향후 이어질 정부

들에서 그 성과가 평가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되면서 한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의 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 발전 및 정치사회의 성숙을 통해 G7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다. 한국은 향후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G10의 국가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G7 국가로서 국제정치경제 및 안보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에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국의 일방적인 비전과 전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의 현실은 한국에게 한반도 통일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평가는 아닐 것이다. 한국은 호혜적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등장을 가져오고, 정상적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에 개혁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환경과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환경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나. 분야별 전략

우리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구축, ② 협력 네트워크 외교 확대, ③ 포괄적 실리외교 지향, ④ 미래지향적 선진안보체제 구축이라는 4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G7에 진입하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안보 및 대북·통일정책 면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별 전략들이 필요하다.

(1) 외교전략

불확실성과 복합성을 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네트워크 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협력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협력외교와 21세기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개념의 결합으로 과도기적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목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직도 엄중한 동북아 안보위기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 국한 되지 않고 변화된 한국의 국격에 걸맞는 대외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협력 네트워크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부터 출발한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강화는 양국 간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한국 외교활동의 안정과 확대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동북아 주요국과도 양자관계 심화를 위한 협력외교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북아 3국은 역사적 또는 정치체제적 제약으로 인해 본격적인 양자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경제통상·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간극을 최소화하고 한국에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은 네트워크적 접근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익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양자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UN 등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향후 포괄적 실리외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에너지 협력외교강화, FTA 체결 다변화, 기여외교 확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지원이라는 기본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들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전략의 명확한 내용과 비전,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그 하위체계로서 외교전략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교대상의 포괄적 범위를 일관된 틀로 체계화하고 각 지역별 외교를 하나로 엮는 지역 간 외교전략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외교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각 이슈영역에 맞는 외교가 필요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포괄적 실리외교를 해나가려면 국가이익의 실제적 내용에 관한 국민 전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포괄적 실리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축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역할 배분과 협력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여섯째, 경제적 분야에서는 WTO와 같은 기존의 다자국제경제기구뿐만 아니라, FTA 네트워크를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이해조정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FTA의 대상을 새롭게 설정하고 가장 유리한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곱째,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기여외교 역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2) 안보전략

21세기 안보환경은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선진 안보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 안보체제의 기본개념은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구현하여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신장하고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더욱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은 크게 ① 선진 군사능력 확충 ② 국방경영 효율화 ③ 대외군사협력 확대 ④ 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 등이다. 그러므로 ‘선진 안보체제’ 구축 방안은 위에서 제시한 전략들을 지속적이면서도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첫째,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의 보편적 흐름에 부합하며, 둘째,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은 국제안보환경의 일반적 흐름에 부합하는 보편성의 원칙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우리의 특수성의 원칙 간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통일전략

통일전략으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현, 그랜드 바겐,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의 발전·조화 등이 필요하다.

첫째, 비핵·개방·3000 구상을 3단계로 추진해야 된다. 제1단계는 북핵 시설 불능화가 완료되는 단계이고, 제2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 이행단계이다. 제3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되는 단계이다.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될 경우 5대 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둘째, 그랜드 바겐은 북핵 일괄타결 방안으로 북핵 폐기의 실천적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단계별 제안을 뛰어넘어 북한이 바라는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타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즉,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경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까지 모든 요구 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의 발전·조화가 중요하

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남북관계만이 전전된다 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역으로 우리의 주변국 관계 만이 발전된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양자의 발전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주변국 관계에서는 미국 및 중국과 의 관계가 중요한데 친미·친중의 기본바탕은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다. 시기별 실천방안

우리 정부가 단기적으로 4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G7에 진입하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중기·장기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적 실천방안들이 필요하다.

(1) 단기적 방안

협력 네트워크 외교 면에서, 한미동맹은 군사적 동맹에 한정된 것이 아닌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주요 전략목표는 군사적 측면과 비군사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군사적 차원에서 동맹미래비전을 확고히 구축하여야 한다.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및 2015년 계획된 작전권 이양에 맞춘 군사적 지원 및 동맹 재조정 에 대한 협력체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비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한미 FTA이다. FTA의 타결은 한미의 경제적 관계심화뿐만 아니라 양국의 전반 적 관계증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 밖에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 권, 범세계적 기후변화, 에너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추축한다.

주요국과의 관계는 정상화, 내실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한일관계 는 현재 복원중인 셔틀외교를 지속하고 양국의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교류 를 확대하여야 한다. 역사문제는 양국 간 장기에 걸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 며, 조용하고 지속적이되 단호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장기적인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유도한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안보분야의 협력관계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단기적 과제는 우선 양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가 정례화되어야 한다. 또한 더욱 빈번한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상호방문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철·녹색 등 우리의 3대 신 실크로드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주요 대상국이며,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극동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정례화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경제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외교안보 차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한·미·일 및 한·중·일 3국간 회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협력촉진자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범아시아를 대상으로는 정상간 교류 강화, 대ASEAN 및 아시아 관심국가에 대한 ODA 추진·확대, 민간봉사단 파견 등을 시행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EU와의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와 협력 및 FTA 비준, 한-아랍 소사이터티(KAS)와 한-아프리카 포럼이라는 양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희소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별 접근과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교류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포괄적 실리외교 면에서, 관-민-연-지역전문가-진출기업-현지 거주 한인-NGO 등으로 구성되는 조직(포럼 등)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외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추진을 적극화해야 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기술 제공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미 FTA와 한·EU FTA 비준과 더불어 이들 FTA의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칠레 FTA를 제외한 여타 FTA의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기체결 FTA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행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여외교와 관련,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와 실천 전개, 규모 증대를 위한 자원 확충, 다차원적·한국적 개념에 부합한 참여자 발굴과 역량 증진 체계 구축, 국제적 기여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과 지지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 지원외교와 관련,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주변국의 한민족문화훼손과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안보 면에서, 선진 군사능력 확충을 위해 북한의 비대칭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15년으로 연기된 전작권전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방개혁 2020’의 미비점 보완 및 각 군전력 간 합동성의 문제도 중요하다.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해 유사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여 조직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민간 위탁의 확대·민군 네트워크 조성 및 발전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자원 안보 차원에서 지리적으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을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및 추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 면에서, 대내적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은 특정한 정파가 독점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며 초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과제이다. 남북문제는 당파적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문제를 당파적 이해가 걸린 일반 정치로부터 따로 떼어내어 초당적 협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상생·공영의 국민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통일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북차원에서 한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에 긴밀한 대화를 이루며 대미·대중 외교를 통한 일괄타결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외적 차원에서는 다른 민족과의 평화적인 공존과 공영을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견지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중기적 방안

협력 네트워크 외교 면에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은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로 새로운 단계로 변화한다. 한국군은 작전권 전환을 계기로 독자적 작전 능력을 구비할 것이며, 군사혁신의 로드맵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적상황 등 한국국익의 수호를 위한 군사력 사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합동성과 전력보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양국은 FTA를 통해 한층 심화된 경제교류와 다방면의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포괄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포괄적 실리외교 면에서,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글로벌화인 대형화를 통해 자원개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외교의 기반 구축을 위해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교류를 적극 활용하고 자원의 교류를 위한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지역외교관을 적극 양성해야 할 것이다.

안보 면에서, 중기 차원에서 선진 안보체제 구축방안은 크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독자 작전능력 배양과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개념 개발 및 발전,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 제시, 합동성 보완 및 강화책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통일 면에서, 대내적으로 통일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한편, 통일을 지향한 대북·통일정책 거버넌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북 차원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완료하여 평화공동체를 추진하고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외적 차원에서 차기 정부의 과제는 핵문제 해결 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3) 장기적 방안

협력 네트워크 면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급변에 대처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 확장역지 및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설계를 주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수행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서는 양국 현대사 경험자들의 후손이 양국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전개될 것이나, 여전히 독도문제와 역사문제는 양국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에 대해 한국은 지속적인 셔틀외교와 고위급 교류를 통한 관계 심화,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확대,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심화된 대중·대러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이 우호적 태도로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환경·녹색 성장 등의 문제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협력 네트워크는 통일환경 조성과 통일이후 안정화 계획을 위한 주요 대화창구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2018년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통일한국 지원 유도, 범아시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완성, 범세계적 이슈의 정립과 의제 제기를 실천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21세기 미래를 주도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제 3 장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제3장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 부 실천방안*

1. 이명박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특징

통일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명칭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다.¹⁵⁾ 그렇다면 비핵·개방·3000 구상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에 제안된 ‘일괄타결(Grand Bargain)’안은 비핵, 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비전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여,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행복공동체(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화공동체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한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함으로써 형성되고, 경제공동체는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돕고, 남북 모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추구함으로써 구축되고, 행복공동체는 남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남북 7천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본 내용은 허문영·배정호·여인근·전병곤·홍우택,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 부 실천방안 (10-15-03)』 연구를 요약한 것임.

15) 통일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통일부, 2008.8).

나. 4대 추진원칙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실용과 생산성의 원칙’아래 비용 대비 성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북한 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기여, ②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견지, ③ ‘국민합의의 존중’, ④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의 원칙’아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려고 노력한다.

다. 5대 중점추진과제

첫째,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현안 해결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이 진정성을 갖고 생산적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둘째,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다. 이는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새로운 평화구조’를 구축하려 한다.

셋째, 상생의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도약이다. 정부는 새로운 남북경협사업은 네 가지 원칙(북핵문제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합의)에 의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넷째, 사회문화교류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고양이다. 기존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를 확대해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쌓아서 통일의 정서적 인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다섯째, 강한 의지를 통한 인도적 문제해결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문제(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권문제(북한주민), 인도적 지원문제(식량난 및 경제난 해소) 모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 「비핵·개방·3000 구상」(DOT)

DOT는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생활양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년내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의 경제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DOT는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북핵시설 불능화가 완료되는 단계이다.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이것이 검증을 통해 확인되면 즉각 비핵·개방·3000구상의 가동준비에 착수한다. 이때 남북한 사이에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을 설치하여 비핵·개방·3000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본격화한다. 그 일환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 투자·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2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 이행단계이다.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한의 기존 핵무기 및 핵물질의 향상 등 우선시행 가능한 내용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꾀으로써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제3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된 단계이다.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될 경우, 5대 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 국제적 현안의 실태와 각국 입장

가. 북한의 비핵화

미국은 북한의 핵을 동북아의 안정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는 요인으로 보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는 설득을 기본으로 하는 외교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접근하려는 의도를 표명하였으나, 2009년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와 2차 핵실험은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대화에서 강경한 압력으로 정책선회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미국은 UN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2010년 NPT보고서에서 북한이나 이란처럼 NPT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가 미국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¹⁶⁾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관심이 높다. 일본의 아소정권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 후,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대북 수출 전면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의 강화에 의한 압박전

16)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9일

락을 추구하였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일본과의 수출입이 전면 중단되었고,¹⁷⁾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가 2009년 7월 16일에 북한의 핵관련 기업 등 5개 단체의 자산 동결 및 북한 고위관리 5명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하자, 일본도 이에 동참하여 제재조치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¹⁸⁾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한반도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비핵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해왔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 일본 등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 하는 핵 확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구실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본격적 개입이 발생해 중국의 영향력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미해결을 아태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6자회담 등 정치적 해결을 위한 모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으로 악화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¹⁹⁾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개발을 활용하여 체제안보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를 해야만 할 경우, 그 조건으로서 미국에게는 대북 적대정책 포기, 북미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북한은 핵동결을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소용 협상카드로 핵 폐기를 주한미군 철수의 단초 확보용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계속 지속하는 모습이였다. 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2009년에도 지속되어 2차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국 위상 확보와 더불어 대미 양자협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보유를 체제유지를 위한 기초로 확고히 한 채, 북한 주도의 대화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있어 대북정책의 모든 기준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진행은 2010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북핵문제의 극적인

17) 아소 내각은 2009년 6월 16일 독자적 추가제재조치로서 대북 수출 금지를 결정했다. 『讀賣新聞』, 2009년 6월 17일

18) 『讀賣新聞』, 2009년 7월 17일(夕刊).

19) "Medvedev calls for peaceful solution to Korean crisis," (<http://en.rian.ru>) (검색일: 2010.6.3).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에게 있어 북핵 문제는 이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과제이므로, 국가안보의 확실성을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으로 북핵문제 해결 지연은 대부분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사회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나.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은 핵무기의 운송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까닭에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문제의 연장선상에 미사일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포동 미사일과 같이 사정거리가 장거리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아직까지 북한의 기술력은 의문의 여지가 많은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사정거리를 늘리려는 시도와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미국의 행정부들은 6자회담을 통하여 핵을 포함한 미사일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 포기를 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만 양자회담이든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마지노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요격능력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열도는 북한의 공격사정권내에 있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핵문제가 북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의제라면 미사일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의제라는 관점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미사일 방공망의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간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압박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체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반도 안보상황이 복잡하게 되고 6자회담이 방해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반도 안보상황이 복잡하게 되고 6자회담이 방해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한국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 600기와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노동 미사일 200기를 갖고 있음으로써 총 800기의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대포동 미사일의 성능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기는 원유도입 및 외화 획득의 도구용, 일본본토와 한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 공격용, 소련의 안보 후원약화 보완용, 제3세계진영에서의 정치적 위신 제고 및 지역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신 확보용, 김정일 체제 내부결속 강화용 등의 복합적 이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사일은 핵무기의 주요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한국에게 안보적 위협이 되는 사안이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억지력 강화이다. 둘째, 미사일 방어망의 구축이다. 셋째, 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북한 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조가 필수적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도 필요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도 필요할 것이므로 외교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한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다. 북한의 탈북자

미국 의회는 지난 2009년 9월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주요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한 인권접근은 부시

행정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과 비교하면 크게 변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은 미북 양자대화에서 핵문제 외에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동해가 있으므로 북한의 탈북자들이 해상을 통하여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의 발발로 인하여 대량난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상을 통해 대량난민의 일부가 일본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평상시에는 북한의 탈북자에 관해 그다지 관심이 높지 않다. 북한 탈북자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관심사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동해 등의 해상을 통하여 대량난민의 일부가 일본으로 유입되는 경우로 일본의 전략적 관심사항은 해상을 통해 일본으로 대량난민의 일부가 탈북할 경우, 공해상에서의 난민구조, 일본 쪽 가까운 공해상에서 북한군의 난민에 대한 충격 감행 등에 대비하는 것이며 해상에서 탈북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안정유지를 위한 지원과 대북 영향력 확대는 중국 대북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된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탈북자 존재 자체는 부담이 된다. 탈북자의 출현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며, 약 1,300km의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의 반발과 대량 탈북사태에 이은 중국 및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증대할 가능성을 우려해 국내법에 따라 탈북자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 쟁점화 된 사안에 대해서 제3국으로 인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철저한 자국 이익에 따라 처리하는 점과 이를 위해 조용히 처리하는 점은 유지되고 있다.

한러 간의 북한 탈북자문제는 1990년대 초에 이미 발생하였고, 한소수교이후 친한국정책을 수행하던 러시아가 1990년대 중반이후 남북한 균형외교를 추진함에 따라서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도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고위급과 가족단위 탈북자들이 넘어오는 경우에 러시아는 체포조를 가동하고 체포자가 10여 명에 달하면 두만강 철교 상에서 북한 측에 인도하고 있다.²⁰⁾

탈북자문제에 대해 북한당국은 공식적 언급을 피해왔으나, 2004년을 전후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안이 미국과 한국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비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탈북자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북한당국의 공식적 정책방향을 알기가 쉽지 않다. 다만 탈북자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조용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북한의 탈북자문제는 한국에게 있어 통일대비, 남북관계, 외교문제 등의 다각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탈북자의 국내 입국자 수는 2007년 2월 총 1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현재 2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초에 개정된 탈북자 지원제도를 통해 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즉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통일정책의 맥락 하에서 우리 사회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라. 남북관계 발전

남북관계 발전을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적극적인 지지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부시정부는 남한과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공동체형성보다는 단순한 무역거래로 한정하였으며, 무역, 투자, 개발 지원 등 분야에 있어서도 북한에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수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한 사건의 해결조건으로 북한의 잘못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하여 미국은 북한이 사과와 유감표명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변화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고 보고 있고, 북한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전개된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의 북방정책이 전향적으로 전개되면서 한소수교, 한중수교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 영향으로 일본 역시 전후처

20) 2009년 4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통일연구원과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MEMO) 간의 국제워크숍 토론 내용임.

리를 위한 외교차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북 접근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실험, 천안함 침몰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의 긴장보다는 안정된 국면을 선호하며, 남북한이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및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관리가 경제발전에 주력해야 하는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제재·압박 및 봉쇄 유도 정책에 반대하는 한편,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포용정책을 선호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중국은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러시아는 접경국인 한반도가 동북아 불안정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한반도에서 분쟁은 국제상황과 러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남북한과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대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체제유지를 위한 협력과 대결정책을 선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2000년 6·15공동선언이후 진행되어온 ‘민족공조론(우리민족끼리)’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공조에는 3차원이 있는데,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리 민족공조’와 안보난 해소를 위한 ‘반미 민족공조’ 그리고 북한중심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 민족공조’가 그것이다.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당국대화를 의제와 속도조절을 통해 북한의 의도대로 끌어가고자 할 것이며, 한국정부를 우회하여 당국 내 야당 정치세력과 연대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남갈등을 심화시켜 한국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세적 협상을 좌절시켜 북한체제를 방어하고자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옵션들이 제기된

것이 2010년 연초의 한국 입장이었는데,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상황은 급격히 냉각되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반도에는 군사적인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한국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북군사적 시위를 진행하였다. 또한 5월 24일에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교류를 중단하는 '5.24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북한과의 관계정립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정책 우선순위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마.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불안정한 정전상태와 군사적 대립구도를 청산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선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한데,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평화협정 체결 및 보장,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군비통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부시 행정부 시절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핵포기를 우선시 하고 있다.

일본은 정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일 역할분담에 따른 군사적 역할 확대 및 이를 위한 군사력의 질적 증강에 등에 기인한 대북 억지력의 강화를 통하여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를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는 북한의 비핵화 다음으로 높다.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의 창출을 강조해 온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구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형성이 미일 세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유리하다는 인식

을 갖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미북 또는 남북의 양자 및 남·북·미 3자간의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중국이 참여하는 4자간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해왔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입장은 한반도에 접경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한반도문제의 중요한 이해당사국이기 때문에 자국이 포함된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안 준비 및 협정 체결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북한은 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 유엔사 해체 및 한미동맹관계 변화 →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화 → 주한미군 철수를 이뤄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 안보대화’라는 틀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여기에서 한반도의 주요 군사 문제 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한미군 문제, 남북한군축 문제 등을 협상하면서 한미 군사관계를 약화시키는 단계적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게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대치하고 남북한 상생·공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과정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이다. 탈냉전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이다. 그러나 6자회담과 연계되면서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 한반도 통일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전제가 있다면 통일한국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다면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미국에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통일된 한반도가 일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일본의 입장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통일 한반도의 대외정책 노선 및 대일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통일 한반도가 대중 편향 외교정책을 취하며 일본에 대해 배타적으로 임할 경우,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통일 한반도가 한미동맹을 견지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지속할 경우, 일본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과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공식입장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지지도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분단보다 통일이 외세의 개입여지를 축소시킴으로써 안보적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점, 한반도 통일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번영 및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점,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통일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근거하고 있다.²¹⁾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에서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반도에서의 무력통일은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무력통일의 주체가 한국이든 북한이든 혹은 미국 등 외세의 군사적 개입이든 모두 단호하게 반대한다.

러시아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그리고 반러시아 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한반도 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평화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남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보다는 분단 상태를 더 선호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개념은 ‘사회구성체론’에 기초하여 통일의 논리로서 『민족해방투쟁론』과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민족분단의 원인으로 강조하고, 통일을 분단된 민족의 재통합이 아니라, ‘미제’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이 추진해 온 통일정책의 특징은 ‘공세적 통일’자세에서 ‘방어적 공조’자세를 거쳐 ‘실리적

21) 陳龍山, “朝鮮半島統一問題論議”, 『東北亞研究』, 1999年 第2期; 張建瓌, “朝鮮半島의統一與中國”, 『當代亞太』, 2004年 第5期

공존(통일)'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 또한 '남북 총선통일'에서 '연방제통일'로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제의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북한에게 있어 이제 남한은 '혁명의 대상'이자, 흡수통일과 관련된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북한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1970년대 이래 '선 평화, 후 통일' 노선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견지하여 왔다.²²⁾ 이 '선 평화, 후 통일' 정책기조는 박정희 정부에서 평화통일 3대기 본원칙으로 나타났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지는 제의로 구체화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에 이르는 중간과정으로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선 평화, 후 통일' 정책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사.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동북아 안보공동체 내지는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해당국들의 인식과 이해관계는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에 비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해관계는 간단치만은 않다. 미국은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과 같은 양자동맹을 강화하는 바탕 위에 다자안보협력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다자안보협력제도가 미국의 행동반경을 좁히거나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미국은 이를 절대 감수하려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미국은 그들의 영향력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국익에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체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미·일 양자 간 동맹을 가장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 등으로 인해 미국과 함께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곧 미국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 간 안보협력 구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동북아 6자회담의 실현도 한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 중심이 아니라,

22) 대한민국 수립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바탕으로 북한을 수복하겠다는 흡수통일의 의지를 작간접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선 평화 후 통일 노선을 명실상부하게 견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영재,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권 1호(2004), p. 399.

고이즈미 정권의 미일동맹의 강화와 대미 편향 외교정책, 미일동맹의 글로벌화, 주일미군의 재편과 미일 전략적 연대의 강화 등이 추구되면서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 9월 민주당의 등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공동체’가 주창되면서 동북아 안보협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다자협력에 대한 무관심에서 점차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정책을 전환해왔다. 그 주된 목적은 경제발전에서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제도화를 위한 중국의 시도는 매우 신중하다. 중국은 자국의 시도가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북한을 배제하거나 공동 타깃(정권교체 또는 북핵 제거)으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체 형성의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 이래로 동북아 역내의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고 제2차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역내국가로서 참여와 역할을 확보하는 차원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6자회담의 중단으로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지역과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을 범주로 하는 광역 아·태 다자안보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차원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와 민간차원의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에 모두 북한은 참여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다자안보대화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는 참여하나,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²³⁾ 지난 2004년 6자회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시기상조라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태 광역의 다자안보대화에는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광역안보대화는 의제가 비교적 광범위하여 북한문제를

23) 백학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 (서울: 세종연구소, 2006), pp. 26~31.

희석시킬 수 있으며, 자신들의 외교적 고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말 냉전체제가 동요하는 가운데, 한국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왔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강대국 간 갈등을 방지하고, 한국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한국은 적극적 자세를 갖게 되었다.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안보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가장 적극 참여하는 다자안보기구는 ARF이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동북아협력대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동경방위포럼,’ 그리고 ‘아시아안보회의(ASS)’ 등이다.

3. 남북관계 현안: 평화의 취약성과 공동체 구축의 지연

가. 한반도 비핵·평화구조 공고화 실태

남북한은 비록 선전적 차원이라 할지라도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각종 제의를 상호 제시해 왔다. 분단직후부터 60년대 말까지는 군사·경제적 우위에 있던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체제와 관련된 주장들을 제기하였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남한 또한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제의(1974.6.18)을 시작으로 꾸준히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의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1991년 소련붕괴 이후 탈냉전적 국제정세가 들어서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된 이후,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지연과 제2차 핵실험(2009.5)으로 인해 이 합의 또한 파기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대청해전, 서해상 미사일 발사,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무력도발을 연이어 자행했다. 요컨대 지난 20여년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근본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나.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조성 실태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정부는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에 약 3조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남북교역액이 110억 여 달러(2008.12.31 기준)에 달할 정도로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북한으로부터는 2000~2004년에 걸친 조심스러운 개혁정책도 끌어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같은 경우는 북한의 주체경제를 변화된 환경과 운영에 적응시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북한은 2005년 이후 시장 단속, 계획경제 강조, 내각 약화·당 강화 등 보수적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2차례의 핵실험, 관광객 피습, 천안함 피습, 연평도 포격 같은 극단적 정책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남북관계 조정국면을 가졌으나, 경제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꾸준히 하고자 했다. 2008년 남북왕래인원은 당국대화 중단 등 남북관계 조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했다. 남북교역 또한 금강산 관광중단, 인도적 지원 감소 등 남북관계 조정 속에서도 18.2억 달러(반입 9.3억 달러, 반출 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또한 개성공단도 계속 성장해서 2008년 말 현재 가동 기업수는 93개로 전년대비 43%, 생산액은 2.5억 달러로 36%, 북한근로자는 3만 9000명으로 72% 증가했다. 사회문화교류도 당국간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체육, 종교, 교육학술 등에서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한다.²⁴⁾

그러나 2009년 들어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2009.4.5) 및 핵실험(2009.5.25) 등 교류협력 추진여건이 악화되면서 남북 교류협력은 다소 감소했다. 그리고 2010년 들어와서는 천안함 피격사건(3.26)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남한정부의 강경한 대북 봉쇄 정책인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보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연평도 포격까지 북한이 도발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 관계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한

24) 6.15 민족통일대촉진(2008.6.15~16, 금강산), 북한 레슬링·유도·축구대표팀 방한, 남한 유소년축구팀 방북행사, 평양 불수교회 헌당예배(157명), 장충성당 미사(96명), 평화통일기원 기도회(99명),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거례말 큰사건 편찬사업 등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 결과 입주기업수, 북측 근로자 수, 생산액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수도 2007년 말 65개사에서 2010년 9월 현재 121개사로 증가했다.

다. 남북사회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실태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순수한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은 예년수준으로 지속 추진하였다.²⁵⁾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상정되어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이 진행되었다. 2010년 6월말 현재 국군포로 79명, 납북자 8명이 탈북 후 국내 귀환하였다.²⁶⁾ 북한인권 개선문제와 관련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 구현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제7차 UN인권이사회(08.3)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했고, 제6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국제인권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지원도 꾸준히 진행해서 2010년 10월 8일 현재 국내입국 새터민은 조만간 2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이들의 증가에 맞추어 교육·수용시설인 하나원을 증설했고,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체·NGO와 협력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라. 소결

이명박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남북 당국 대화가 열리지 못했으며, 이산가족 교류 등 당국 간 협력사업도 중단되었음을 인정한다.²⁷⁾ 이명박 정부는 그 원인이 북한에게

25) 민간단체 지원(개별사업: 40개 102억 원, 합동사업: 2개 18억 원, 정책사업: 4개 44억 원), 국제기구 지원 (WHO 말라리아 방역 118만 달러, WHO-UNICEF 영유아 지원 1,434만 달러, IVI 백신지원 49만 달러)

26) 현재 560명의 국군포로와 500명의 납북역류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7) 통일부, “2008 남북관계 어떻게 추진되었나?,” (2008.12.18)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08.2)이후 유연한 대북정책²⁸⁾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3월말부터 대남 강경조치와 함께 이명박 정부 비난을 시작하고, 7월에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을 통해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9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이 유포되는 가운데 10월부터는 대남 위협을 강화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같은 북한의 압박조치는 3가지 의도가 있다. 남한사회에 불안감을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대북정책을 전환시키려는 의도, 북한주민들에게 대남적개심 강화로 체제결속을 이루려는 의도,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북한이 겉으로는 6·15 및 10.4공동선언의 무조건 이행과 비핵·개방·3000 정책의 포기를 대화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반도 긴장조성을 통해 과거방식의 남북관계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상황을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기위한 조정기로 규정한다.²⁹⁾

4. 국내적 현안의 실태와 과제

가. 북한관과 대북정책 인식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들 중의 하나가 북한관과 대북정책에 관한 것이다. 북한관과 관련, 2008~2010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행위 때문에 경제·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진보의 대북 인식이 급격히 부정적·비판적으로 변화했다는 점, '20대의 보수화' 경향이 보인다는 점, 이념성향에 무관하게 국민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다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점점증하는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통일의 가능시기에 대해서는 2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28) 이명박 대통령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 5차례 대화 제의, 2차례 대북식량(옥수수 5만 톤)지원 제의

29) 통일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노력," (2009.2) p. 4.

등 다양한 견해들을 갖고 있다.

대북정책 인식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대북정책 결정시 국민의견 반영 정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의 신뢰정도 등 본질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보수, 중도, 진보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이념 간 편차가 심하지 않으나 국내정치 문제와 연결될 때 남남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핵과 대북 지원 연계, 대북 뼈라살포 제재, 북한 인권문제 제기,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등 대북정책 관련 구체적인 쟁점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이념 성향에 따라서 명백히 차이가 나는 시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는 오히려 시각의 수렴도 확인되었다.³⁰⁾

나. 대북·통일정책 시스템

(1) 참여정부

참여정부의 대북·통일정책시스템은 국가안보보장회의(NSC)의 사무국이 핵심이다. 참여정부의 전반부(2003~2006), 대북·통일정책은 NSC의 사무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국의 경우,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안보와 화해·협력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해 NSC가 김대중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설립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경우, NSC의 사무처는 지극히 작은 조직이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수준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노무현정부의 NSC는 평화변영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국가안보전략수립기능 강화, 통일·외교·국방분야 등의 정책조정·통합 기능의 강화, 국가정보의 종합화 및 공유체계의 확립,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확립 등을 지향하여 이전보다 더욱 확대·개편되었다. 참여정부의 NSC 주요조직은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는 김대중정부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노무현대통령은 외교안보관련 보고채널을 NSC사무처로 단

30) 강원택, "정치인식과 대북정책"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 (학술심포지움 논문, 2010.9.7), p. 77 참조.

일화시켰다.

그러나 이는 실제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는 청와대 소속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무처장을 겸하면서 NSC의 참모조직을 지휘·통솔하게 되었으나, 국가안보보좌관 겸 사무처장은 지휘, 통솔에 핵심인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지 못하였고, 조직 장악에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미국 NSC의 경우 안보보좌관은 부처 간 정책조정자 및 개인참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정책조정 및 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참여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주로 대통령 개인참모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정책 조율 및 조정역할에 취약하였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균형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NSC 사무처 전문가 구성은 다소 진보 또는 좌파 성향으로 이념적 균형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후반기에 오면서 NSC의 사무처를 축소 개편하여, 사무처는 회의소집 기능만 담당하였고, 정책조정 기능은 대통령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환원되었다.

(2)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하고 있고, 「평화·경제·민족」의 3대 공동체 개념을 구체적 통일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부정은 노무현정부가 대통령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분야를 기능 중심으로 조직한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부처 중심으로 재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조직을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안보수석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이념의 산물’이 아닌 ‘실용의 산물’로 하기 위해 대북·통일정책시스템을 관료 중심, 부처중심으로 운용하였는데, 이는 전략적 전문그룹이 부재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략적 컨트롤 파워가 취약한 상태에서 관료 체제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통일정책 거버넌스의 역량이 취약한 편이다.

다. 대주변국자세 실태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국가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내부에서도 친중과 친미의 대결이 팽팽하게 엇갈리게 되었다. 천안함사태에서도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함께 남남갈등을 또 한 번 보여주었다. 한국이 추진하였던 대북제재 강화는 미국일변도의 정책이었으며, 결국 중국을 자극해 한중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이룬 대주변국 인식이다. 극단적으로 반미를 외치는 것도 균형을 잃은 인식이며, 중국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도 균형을 잡은 인식이라 할 수 없다.

많은 지식인들은 균형잡힌 외교가 향후 한국의 외교방향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친미-친중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친미친중 하는 것은 물론 용미용중도 해야 한다고 한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눈치도 살피야 하고, 두 국가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줄타기를 잘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경쟁관계라고 까지 할 수 있는 둘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안보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견제력을 갖추려면 남한 단독으로는 힘에 부치기에 미국의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200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이, 2006년부터 매년 2,000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현재까지 누적 인원이 18,339명에 달하고 있어 올해 내 2만 명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입국 경로는 중국의 단속이 강화된 2004년 이후부터 중국을 통한 입국에서 제3국을 통한 입국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입국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는데,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더니 최근에는 80%를 육박하고 있다. 이는 가족 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장년층(20~49세)이 75%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20세 이하 및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21%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 학력 소지자가 70%를 차지해 압도적이며, 대학 이상의 학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정도 많다. 북한이탈 주민의 재북 시 직업유형을 보면 무직부양이 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동자가 39%로 높았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62%가 집중되어 있고, 52%가 공공임대에서 거주한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와 북한의 실상, 그리고 점차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통일대비 국내역량 강화 방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추진이나 안정적 정착유도를 통해 한반도 통일시대 주민통합의 성공적 모델 창출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무부처는 통일부이다. 그리고 이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책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인도적 문제해결이라는 상위의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목표 및 정책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인식공유와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국자의 특성 및 정착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남한사회의 통합을 넘어 남북한의 통합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통일교육, 통일대비 국내역량 강화, 통일외교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비용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재정조달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대북·통일정책의 실천방안

가. 기본방향

(1)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

비핵·개방·3000전략(이하 DOT)는 3단계로 추진된다. 제1단계는 북핵 시설 불능화가 완료되는 단계이고, 제2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 이행단계이다. 제3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되는 단계이다.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될 경우 5대 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 그랜드 바겐

그랜드 바겐은 북핵 일괄타결 방안으로 북핵 폐기의 실천적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단계별 제안을 뛰어넘어 북한이 바라는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타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즉,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경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까지 모든 요구 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랜드 바겐’방안은 북한 비핵화의 전략적 방침으로서 6자회담 참여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하여 일관된 원칙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해와 협력·지지 획득이 중요하다고 본다.

(3) 남북관계와 주변국관계의 발전조화

친미·친중의 기본바탕은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한 중국 설득으로 가야 할 것이다. 사실 중국은 한국에 안보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동맹국이자

후원국이다.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에 관한 이해는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친중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한국이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중국을 상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한국을 적대시 하기는 힘들다.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 중국에게만 지렛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이 중국에 갖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나. 세부 실천방안

(1) 단기

대내차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은 특정한 정파가 독점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며 초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과제이다. 먼저, 남북 간의 냉전을 해체하기 이전에 한국사회 내부의 냉전을 해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지지 없이 남북대화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문제에 관해 야당과 대화합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문제는 당파적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문제를 당파적 이해가 걸린 일반 정치로부터 따로 떼어내어 초당적 협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상생·공영의 국민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남남갈등은 분단과 냉전구조가 완전하게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도기적 상황이다. 여야 간의 대화와 협력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소모적 이념논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 화합 및 통합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각 분야별 협력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통일 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책 목표와 실천 방안들이 공론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통일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북·통일정책을 조정하는 주도적이며 상징

적 인사와 그를 지원하는 전략적 전문그룹이 부재하므로, 대북정책의 콘트롤 타워를 설립해야 한다.

대북차원에서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경제를 정상화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에 긴밀한 대화를 이루며 대미·대중 외교를 통한 일괄타결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대외 차원에서는 남북화해와 협력 시대의 민족주의는 기존의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적 민족주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종족적 민족주의(ethno-nationalism)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의 평화적인 공존과 공영을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여야 한다. 우리 정치권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남북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4강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민족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국제주의적인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주변국 협력이 요구되는데, 미국은 각종 대내외 정책 입안이 의회의 관련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주지하고, 결국 통일 및 대북정책에 관한 비전 제시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이미지메이킹은 의회의 정책입안자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행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외교 초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에게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한일 국익의 공통부분을 개발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우리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 붕괴에 있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있음을 중국에 주지시켜, 한중관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명실명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러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외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과 반관반민(半官半民)의 1.5트랙(track)차원에서 북한의 장래를 주제로 하는 공개 및 비공개 국제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을 많이 개최해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중기

차기정부는 대내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등의 냉전적 제도를 개선하여 평화공동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북 차원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완료하고 동북아개발은행(ENADB)과 같은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군축과 정치·경제·문화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군축 실현에는 비관주의적 제약요인들과 낙관주의적인 가능요인들 양쪽 모두 다 상존하지만, 경제협력의 상호이익과 정치·경제·문화 협력을 통한 화해분위기 조성, 그리고 정치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고려할 때, 군축은 앞으로 더욱 실현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가 전제될 때 동북아 및 세계에서 강(強)한 중위국으로, 경제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 차원에서 차기 정부의 과제는 남북한 관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당사자 국가들의 합의점 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의 성격이다.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반도에서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에 앞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 실현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제가 건설되는 것이 대외적인 국가과제가 되며, 그것이 실현되면 한반도 내에서의 통합과 동북아 내에서의 평화가 실현되고 경제공동체로서 경제통합을 심화될 것이다.

(3) 장기

2020년 이후의 한국은 대내적으로 평화협력 인력을 양성해서 통일한국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평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이 단일의 정체성(identity)을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 이르러서는 박정희 집권 시기의 국가부흥기와 같은 기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제2의 국가부흥 계획안을 만들어 국가경쟁력(state competitiveness)을 강화해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북차원에서 한국은 남북연합을 실현해서 경제·안보공동체(economic and security community)로 발전하도록 해야 하겠다. 남북통일과정은 남북한 간의 평화공동체가 공고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 과정을 단계적으

제 4 장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제4장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1. 서론

한국 외교에 있어 21세기 초는 전통적인 외교안보적 과제가 잔존하는 가운데 격변하는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중견국가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지속과 변화의 시기이다. 전 세계적 과도기에 한국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보유한 자산과 가치를 배양하면서 한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어 내는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외교는 철저한 현실인식과 다양한 국내외적 요구가 반영된 최적화된 외교전략과 실천을 통해 외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량에 부합하는 외교적 선도국으로 등장해야 한다.

전통적인 한국 외교의 당면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한국은 북한의 반확산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가 절실한 시기이다. 이와 함께 21세기에 당면한 새로운 도전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전세계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위협이다. 경제위기, 테러, 환경, 인간안보 등 새롭게 등장한 위협은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행위자들에 의해 지역화, 세계화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해결수단도 각 이슈영역마다 새로운 유형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전환기 도전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는 차별되는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하였다.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달성 전략으로서 협력 네트워크 외교를 설정한 것이다. 성숙한 세계국가란 한국이 범세계적 차원에서 지구촌 공통 관심사에 관해 적극 협력하고 처방을 내리는 나라를 뜻한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 본 내용은 남궁영·김형기·이상현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10-15-04)』 연구를 요약한 것임.

범위는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가치까지 포괄하며, 그 대상은 한반도 주변에서 출발하여 전세계 전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는 협력외교와 네트워크 외교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외교는 기본적으로 양국관계의 맥락에서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상호교류와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력외교는 전통적인 외교에 있어 우호국과의 양자관계 및 특정 목적을 위한 다자협력과 동일하다. 즉, 양자관계의 협력의 증진을 통해 기존의 우호관계를 심화시키고, 과거의 대립을 우호로 전환함으로써 양국의 이익을 ‘단순한 합산 이상으로 만드는’(greater-than-the-sum-of-its-parts system) 외교이다. 근본적으로 협력외교는 국가단위의 국제관계를 전제하며, 국가행위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협력을 통해 최선의 국익을 추구한다.

2.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이론적 배경

가. 네트워크 시각의 국제질서

한편 네트워크 외교의 이론적 배경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네트워크 권력론에서 찾을 수 있다. 비교적 새로운 시각이며, 그 정밀성과 설명력이 완성되지 않은 과정이므로 아직 다양한 논의가 축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개념이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스마트 파워(smart power) 및 비전통적 외교수단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국제질서는 복잡적 네트워크질서, 혹은 복합변환(complex transformation)의 시대이다. 마누엘 카스텔이 이미 오래 전에 네트워크사회의 도래를 언급했듯이 인터넷, 세계화, 초국가·탈국경화 현상의 심화는 보편적 현상이다. 경제활동이나 정보지식의 공유와 같은 일상생활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군사안보의 네트워크화가 보편적 현상이 된 지 이미 오래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은 이른 바 ‘나머지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상징하는 ‘G2시대’의 도래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글로벌 위상변화는 한미동맹관계에

속한 한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해안을 요구한다.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룬 바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으로 표현한다. ‘나머지의 부상’은 중국, 인도 등 국제정치에서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었던 거대국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국제질서에서 미국 패권의 상대적 위축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국제질서는 이제 ‘포스트 아메리카(Post-Americanism)’ 시대로 전환하는 중이다. 포스트-아메리카 세계질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합성’이다. 정치군사 질서는 여전히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적 질서가 유지되겠지만 군사 외의 모든 차원—경제, 산업, 금융, 사회, 문화—에서는 힘의 분포가 미국 지배로부터 이탈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치·군사적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정보혁명의 결과 군사안보의 충돌 양상은 과거에 비해 실시간으로 지구촌 주민들에게 전달되면서 과대포장 되고 더 큰 충격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군사력을 앞세워 국제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정치·군사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총량규모는 지난 15년 간 두 배 이상 팽창했고 동 기간 무역은 133% 증가했다. 전쟁, 테러, 내전은 일시적으로 국제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세계화의 물결에 압도당한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와 국제경제의 팽창의 결과 신흥부상국—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들의 경제성장에 고취된 신민족주의가 분출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적 관점의 분출은 정보혁명 덕분에 더욱 확대재생산되어 배포되고, 목소리 큰 행위자들의 증가는 곧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서 갈수록 합의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미국이 여전히 초강대국이지만 혼자 힘으로 국제문제를 리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네트워크 권력론 시각은 21세기 국제질서의 새로운 속성인 네트워크화에 초점을 맞춘다. 네트워크는 “이로운 협력을 가능케 하도록 서로 연결된 행위자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때 네트워크의 중심 요소는 표준(standard)이다. 표준은 한 네트워크에 속하는 구성원을 서로 연결하는 특정 방식으로서, 구성원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네트워크권력은 특정 네트워크의 표준이 그 네트워크 구성원 또는 비구성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 네트워크권력의 크기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먼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숫자다. 즉 네트워크 효과는 표준을 공유하는 행위자, 즉 구성원이 많을수록 크다. 동일한 표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 간의 협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네트워크가 더욱 매력적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네트워크권력 결정요인은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바람직한가(desirability)이다. 즉 각 네트워크가 표방하는 목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는가의 문제다. 특정 목적 달성에 효율적인 네트워크는 그것의 내생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들의 신규 가입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중요성(significance)이다. 어떤 표준이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할 경우 외생적 네트워크 효과가 커진다. 즉 그 네트워크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약소국들은 그 네트워크의 표준을 수용하거나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강대국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갖는 권력적 측면이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는 특정 표준 또는 규칙을 공유하는 행위자들 간의 연결 상태를 의미하며, 네트워크권력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클수록,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비중과 중요성이 클수록 증대한다.

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전략과 협력 네트워크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코리아 국가전략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강국으로서 한반도에 고정되었던 외교안보의 프레임을 벗어나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와 아울러 글로벌 문제에서의 리더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에 의하면 21세기의 동북아시아는 더 이상 이념과 가치를 갖대로 한 적대진영외교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없으며 경제통상·사회문화 교류를 심화하면서 안보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한국외교는 이러한 21세기 국제질서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안보환경, 대응전략 및 방향을 위주로 향후 바람직한 외교안보 태세 및 대북태세를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전략은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네트워킹과 연대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국이 속할

곳은 세계질서의 주도그룹(leading coalition)으로서,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고, 한국의 국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적고, 국익에 도움이 될 세력들의 연합과 복합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이 펴놓은 네트워크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고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네트워크를 미국 일변도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루기 위해 크게 협력 축과 네트워크 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실 두 개의 축은 명확한 경계가 없으며 당면한 전략적 지향점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미관계, 일·중·러 등 주요국관계, 범아시아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가 한국 외교가 수행할 협력 네트워크의 대상이다. 협력 네트워크의 수행원칙은 일차적으로 한미관계와 주요국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협력 외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적 요소를 보완하면서 추진한다. 아시아와 글로벌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형성이 주가 되며, 실용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국가와는 맞춤형 협력외교를 수행한다. 이러한 협력과 네트워크의 구별은 전통적 협력과 네트워크의 권력 개념의 상이성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전통적 권력의 경우 허브(hub)와 노드(nod)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네트워크에서는 연계(link)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주변국의 경우 여전히 안보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동하는 상황이므로 네트워크보다는 전통적인 허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글로벌 차원에서 허브의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한국의 국익추구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주목적이 된다.

3.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추진

협력 네트워크 외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축을 이루는 것이 한국과 미국 간 21세기 전략동맹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 체결 이후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한반도 안보를 담보함으로써 한국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자 한국외교의 기본 축으로 작동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변화된 전략환경과 미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8년 4월 캠프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안보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시켜 가기로 하고 “21세기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을 합의하게 되었다.

21세기 전략동맹은 한반도 중심의 냉전형 동맹을 넘어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미래 안보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관점과 글로벌한 시야에 입각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가치동맹,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의 양국 간 신뢰를 공고히하는 신뢰동맹,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동맹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 유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주한미군사령부 개편 등의 현안은 큰 변동 없이 추진될 것이다. 양국은 2012년으로 예정되었던 전작권 전환을 2015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한국의 합동군사령부(JFC)와 주한미군의 한국사령부(US KORCOM)를 각각 창설해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괄적 전략동맹론’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라는 제한된 범위에 한정시키지 말고, 동맹의 성격도 전통적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과 함께 21세기형 새로운 포괄안보 위협, 즉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불법인구 이동·해적 행위 등에 대해 전략적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포괄적 전략동맹은 첫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둘째,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의 양국 간 신뢰를 공고히 하며, 셋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동맹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가치동맹이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인권침해, 테러, 마약, 환경침해, 재난 등 ‘인간의 안위에 대한 위협’(인간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해 나가는 동맹이다. 신뢰동맹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두 시민사회 간의 이해와 관용의 폭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평화구축동맹은 양국이 군사동맹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동맹을 말한다.

한미관계에서 앞으로의 관계는 양국 관계를 명실상부하게 전략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를 한·미 두 시민사회 간에 종(縱)과 횡(橫)으로 엮여지는 다층적·복합적 네트워크로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정부 차원의 정치적 관계가 흔들리더라도 시민사회 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한미 양국의 동맹비전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공유의 폭이 넓다. 한미 간의 현안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과제는 두 시민사회를 엮는 폭넓은 네트워크의 확대와 심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관계가 정치적 부침을 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시민사회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깊어져야 한다. 한미 전략동맹의 세 가지 축 중 하나인 신뢰동맹은 바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 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과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시행 등 한미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2008년 10월 30일 체결하여 경제관계의 심화도 더욱 진전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이지만, 아직 도전요인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미국을 통일우호세력으로 잡아두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지하기 때문에 동맹만 잘 유지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부분 비확산 및 급변사태 대비, WMD 관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장기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조율을 미리 확실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 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TF 보고서는 한반도 정책의 6가지 우선순위를 수평적 확산방지, 수직적 확산방지, 비핵화, 비상사태 계획, 포용 촉진, 북한주민들의 처지 개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단기적인 비확산 중심에서 장기적인 통일정책으로 미국정부의 정책관심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주요국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발전

가. 일본: 성숙한 동반자 관계

일본과의 관계는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동질성이 갖는다. 그런 이유로 한·미·일 삼국 간 가상동맹(virtual alliance)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하다. 양국 간에는 아직도 과거 역사로부터의 아픈 기억이 관계진전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 요인이다. 그럼에도 양국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 확대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발표된 것은 대일 네트워크 구축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한·일 양국 학자 26명이 참여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일 신시대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되는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신뢰를 쌓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설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보고서는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3개 분야의 21개 제안을 담았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올해 100년을 맞은 한일병합에 대한 언급이다. 보고서는 “21세기 초반 일본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병합을 단행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한일관계의 방향에 대해 기존의 정치, 군사적 분야에서 환경, 과학, 정보, 지식 등까지 확대해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보고서가 양국의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느냐이다. 실제로 보고서에 포함된 한·일 해저터널 건설,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 등은 양국 정부가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예산문제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국책사업들이다.

한일 양국은 양자 차원의 네트워크와 더불어 다자·지역 차원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일 양국이 우선 추진이 쉬운 부분부터, 예를 들면 FTA나 환경·기후협력, 역내 에너지 안보 협력 등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이슈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도 딜레마에 관해서는 될수록 조용

한 외교(low key)를 통해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급적 독도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의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거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외교 현장에서는 정작 긴급상황 발생 시 중국측 관계자와의 면담은 커녕 전화 통화조차 힘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한중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정책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 한중관계는 수립된 지 이제 20년 남짓이다. 한중관계에서 반세기 이상을 지속해온 한미동맹과 같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을 기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장기적으로 양국 간 신뢰의 결여를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국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맥관리와 더불어 정권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대중국 정책 기조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한 때 한미전략동맹이 한중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21세기 복합적 네트워크 시대에 한미-미중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방중 시 드러났듯이 한미 전략동맹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 개발이 필요하다. 안정된 미중 관계는 한중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안정적 중국정책을 환영하는 동시에 우호적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한미동맹이 대중국 적대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미중 간 협력관계 강화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미중 간에 북핵문제를 둘러싼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중 양국이 그런 차이를 서로가 솔직히 시인하고 대화를 통해 시각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할 일은 이러한 G2시대의 향배를 잘 진단하고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 러시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러시아와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을 전후로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는 신흥경제 4국(BRIC's)이면서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초강대국의 지위로 복귀하기 위해 외교적 위상의 재정립과 함께 경제협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러시아와의 외교안보 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은 중국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관계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메르베데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 관계의 수준을 더욱 진전시켰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계기로 한·러 양국 간 협력 의제가 양자 차원에서 지역 및 세계 차원으로 다양화되고, 협력 범위도 경제·문화 영역에서 정치·외교·군사·안보 분야 등 민감한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주변 4강의 대척점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관계 유지에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러시아는 6자회담에 참여해 오면서 동북아 및 북한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은 근본적인 전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자원 부국인 러시아의 중요성은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는 신실크로드 건설의 상대국이다. TSR-TKR의 연결, 남·북·러 3각 협력의 구체화,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계획에의 참여, FTA 체결 등을 통해 한국이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협력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주·항공·방산·원자력 기술은 반드시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라. 동북아 협력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 헤징(Hedging) 전략으로서의 다자안보협력, (2) 정부 간 협력네트워크의 형성, (3) 비정부 차원 협력

네트워크 구성, (4)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헤징(Hedging) 전략으로서의 다자안보협력

현재의 한미 양자동맹에 치중된 우리의 외교안보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자안보협력은 양자 군사동맹이나 다자 간 집단방위·집단안전보장체제 보다는 낮은 수준의 안보 협력이지만 양자동맹 위주인 한국의 외교안보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다자 안보체제에는 NATO형과 UN형의 집단방위체제가 있다. 동북아에서는 아직 그런 의미의 다자안보체제는 실현될 여건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구도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고, 기존 안보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

(2) 정부 간 협력네트워크

정부 간 차원에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각종 전략대화를 통해 주요국들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미 '2+2' 전략대화, 한일 전략대화, 한러포럼, 한중 전략대화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국별, 이슈별, 협력 기제별로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정부 간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우선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북핵 6자회담의 동북아평화 안보체제 워킹그룹이 있지만 6자회담이 개업휴점 상태에 빠지면서 평화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다자적 활동도 정체된 상황이다.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정부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제기구에서의 다자외교 강화이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이다.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다자안보협력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무엇보다도 역내 주요국들이 다자안보협력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연평 폭격 사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 동북아 주요국의 대화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역협력체의 부재는 불필요한 갈등의 증폭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주도적으로 6자회담의 틀을 이용하여 북핵문제 뿐만아니라 다양한 동북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정부 차원 협력네트워크

정부 간 협력만으로는 진정한 네트워크로의 발전이 어렵다. 정부 간 노력에 더하여 각종 기능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비정부 차원의 노력으로는 전문가 공동연구, 사회문화적 교류, 학술교류 등을 들 수 있다.

비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의 대표적 분야는 비즈니스 분야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의 국제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 외에 비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가능한 분야로는 국제 NGO 활동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Green Corps' 회원들이 중국 공청단과 협력해 중국 내륙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나무심기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좋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국제개발기구(UNDP)의 지원을 받아 한·중·일 삼국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민간도 참여하는 두만강유역개발사업(GTI, Greater Tumen Initiative programme)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공동연구나 역내 학술교류 사업, 한·중·일 3국 간 역사 공동연구 등은 큰 비용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다.

민간의 협력네트워크 확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한계가 있다. 동북아 각국이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비정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협력 네트워크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는 한반도 분단에 따른 다양한 군사적 위기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주지하다시피 현 북한문제는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남한과의 문제를 넘어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탈냉전기 이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기를 겪어오면서 동북아 각국은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1개국 단독으

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위기와 인도적 문제 또한 상당한 수준의 국제공조의 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5. 신아시아외교 내실화

협력 외교의 바탕위에 전개될 네트워크 외교는 범아시아 네트워크와 글로벌 네트워크로 분류하였다. 한국 외교의 역량 증대와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지리적 이격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신아시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여기에 동북아 4국, 동남아(ASEAN), 서남아(인도 등), 중앙아(키르기스탄 등), 남태평양지역(호주, 뉴질랜드)를 포함시키고 있다.

신아시아 협력외교는 비핵개방 3000,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글로벌 에너지 경제외교, 한국형 선진 기여외교, 문화코리아 외교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외교안보 구상의 일환이다. 신아시아 협력외교는 아시아가 세계화 시대의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불신의 딜레마도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고, 아시아의 일원으로 세계화의 아시아를 주도함으로써 아시아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3대 비전은 첫째, 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주도하고, 둘째, 조화로운 협력질서를 이끈 연성강국(soft strong power)을 지향하며, 셋째, 다양한 분야의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아시아 협력 외교의 주요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첫째, 장기적으로 역내 국가들 간 정치, 경제, 안보, 문화적 차원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한다. 둘째, 아시아 주요세력인 일본, 중국, ASEAN, 호주, 인도 등과 양자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셋째, 중앙아-몽골-러시아-중국-북한-한국-일본을 연결하는 트랜스 아

시아 에너지 협력벨트 구상을 추진한다. 넷째, 6자 회담 이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협력안보 공동체 창설 방안을 제시한다.

신아시아 협력외교 구상은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신질서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신정부의 새로운 외교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역내 주요 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 아시아를 관통하는 에너지 협력 모색,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주요 행동계획 중,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구도 창출문제는 향후 한국의 지역협력 외교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역협력 외교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특히 아시아 주요 지역별로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남아시아

남아시아의 범위와 경계는 남아시아지역협력체(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에 가입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아프가니스탄, 부탄, 몰디브의 8개국을 포함하지만 유엔인구정보네트워크(UN Population Information Network)는 미얀마와 이란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남아시아는 인도-아란족, 드리비디안족, 몽골족, 오스트로족을 중심으로 약 2,000여 개의 종족이 약 4,480,000km²의 면적에 거주하고 있다.

남아시아는 인도반도의 남쪽 대부분이 인도양에 면해 있으며, 힌두교·이슬람교·불교·라마교 등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나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지배적이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종교의 힘으로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힌두 문명의 전통과 특이한 풍속 습관이나 보수적인 사회제도가 폭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문화면이나 경제면에서도 낙후되어 있다. 산업은 일반적으로 농업 중심의 저개발지역이나, 인도에서는 IT 산업분야 등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아시아 외교 구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 남아시아 전략은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한 가운데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 남아시아

지역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협력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 등 경제 인프라와 보건·인적자원개발 등 사회인프라 지원, 그리고 기후변화, 식량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농업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남아시아는 여전히 문화적, 지리적으로 우리에게서 먼 지역일뿐 아니라 교류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아시아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통상협력 환경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협력강화 전략으로는, 우선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와 남아시아 국가 간의 이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남아시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수집능력 배양,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를 통한 우리 상품의 인지도 제고 등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함으로써 남아시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호적 협력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보다 긴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남아시아 국가들은 APEC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APEC를 통한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ASEAN

아세안(ASEAN)은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을 발전적으로 해체시키고 1967년 8월 8일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출범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의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이후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현재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와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왔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무역 및 투자 협력대상으로서 2008년 현재 중국, EU에 이어 3위의 교역 지역이며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5대 교역 상대국이다. 특히

한·아세안 FTA 추진은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이자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회복으로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한·아세안 FTA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환경 개선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아세안 관계는 한국의 국력에 걸맞게 협력 수준을 격상·조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양자 간-개별국가 중심의 협력을 다자간-지역 수준의 협력으로 한층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러 국가들과 맺어진 전략적 협력관계를 점차 주변국에서 범아시아, 나아가 세계 각 지역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아세안 주도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하는 지역 개발에 동참해야 실질적 우호 관계를 넓힐 수 있다.

다. 대양주

대양주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말레이 제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마셜, 키리바시, 비누아투, 팔라우 등 14개 국가로 이뤄져 있다.

대양주는 그 동안 남태평양에 위치하여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정치·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양주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호주·뉴질랜드와의 교역도 높은 1인당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각각 2,000만 명과 400만 명 정도의 적은 인구규모로 인해 한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도서국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육수준과 국민통합 미완성, 강력하고 유효한 정책부재로 인한 만성적 저개발, 고실업, 빈곤 및 치안불안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대양주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통상에 있어서는 주목받지

나 전략적 파트너로서 고려되는 데는 제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대양주지역에 가지는 또 다른 중요성은 외교적 보완성을 들을 수 있다. 대양주 국가 중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들파워(middle power)로서 국제사회에서 높은 외교적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여러 국제기구 및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외교적으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제한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는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입장과 정책이 특정 현안에 반영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관계도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정책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지지는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과정에서 호주의 협조와 지지는 한·호주 간의 우호관계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양주 국가들의 외교적 명성과 영향력, 그리고 투표권이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와 같이 우리나라에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연간 총 ODA의 약0.4% 수준에 지나지 않는 무상원조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된다.

라.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 유라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반테러 전쟁의 배후지, 신흥 공업국인 BRIC's 3개국의 경제성장 배후지역, 전통 및 비전통 안보이슈

의 상존 등 전략적 요인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카스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석유, 천연가스, 동광, 철광, 우라늄광, 석탄광 등 풍부한 환금성 자원 부존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협력과제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외교의 공고화이다.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에너지·자원외교는 자원보유국과의 전반적 우호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변국의 에너지·자원외교 사례를 통해 볼 때, 궁극적 목적은 자원개발 및 확보에 염두를 두고 있으나 자원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우호활동에 치중하여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관계는 물론 역내 전략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7월 제15차 비동맹 각료회의 시, 한반도 조항 문제관련 회의 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우리나라 입장 관철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에너지 협력을 넘어 보다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6.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는 영역별, 지역별로 동일한 가치와 특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유럽과의 FTA 타결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세계금융위기의 타개, 산업 간 투자 및 협력, 지역 분쟁에 대한 공동대체 등의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중동과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은 한국 경제에 사활적인 에너지 수급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그러나 명시적인 자원수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적 사고를 도입한 외교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교류의 영역을 확대하고 개발 및 우호협력을 확충해야 한다.

가. EU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1963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긴밀한 관계 유지해 오고 있다. 냉전시기 동안 우리나라와 EU는 미국중심의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동서 대립관계에 있어 공동보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양자 관계는 주로 경제·통상 분야 발전에 치중해 왔다.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각종 통상현안도 원만히 타결됨에 따라 한-EU 간의 전반적인 협력 분위기가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1993년 11월 유럽연합 출범이후 유럽통합 움직임이 공동외교안보정책분야로 확대 발전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와 EU와의 정부대화 채널 수립 등 정치·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도 점증하고 있다.

한편 한-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정책 공조와 더불어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틀을 통해 사안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거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교 협력의 강화 문제이다. 대표적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강화문제이다. 우리나라와 EU는 상호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도전에 대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저탄소 경제' 목표를 지속 추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EU는 '포스트 도쿄'(post 2012) 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범지구적 리더십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U가 주도하는 유엔 프로세스에서 아직 선진국 그룹에 속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독자적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협상 과정에서 기준년도 설정 등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 협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핵 폐기와 관련한 협력 강화이다. EU는 안보 이슈에 관해 다자간 평화적 해결이라는 외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기조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와 EU는 북한을 포함한 외부의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폐기 등 사안에 있어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핵 문제에 관한 공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EU의 관계를 정치·외교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EU의 협력은 보다 다양하고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실천조치로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실천방안, 그리고 외교·안보 영역 문제 등을 논의할 ‘고위급 전략대화’와 같은 실질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중동·아프리카

중동지역은 우리의 플랜트 및 기자재의 제 1위 수출시장이며, 전체 원유 수입의 85%, 천연가스 수입의 73.4%를 차지하여 경제·통상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동지역의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30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282억 달러에 이르러 약 4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에 속한 6개 산유국들(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오만·카타르·쿠웨이트)은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서 중동 지역 최대의 경제권이다. 최근 이들 지역에 고유가로 인한 달러 유입이 늘어나면서 GCC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심화를 적극화 하고 있다. 무역총액으로 볼 때 GCC는 우리나라의 제 4위 교역대상이다. GCC와 한국의 무역동향을 보면, GCC 무역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애 따라 증가하는 GCC의 수입을 보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의 성장률은 2006년 26.3%, 2007년도 55.2%, 2008년도 37.8%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의 GCC에서의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2009년에는 해외 비즈니스의 67%를 차지하게 되었다. 석유 및 석유류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높은 GCC 의존도(원유 수입의 68%, LNG 수입의 47%)를 감안 할 때,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한 GCC국가와의 관계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GCC와의 단기적 과제는 FTA체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GCC는 EU·중국·일본 등 여러 나라와 활발히 FTA를 추진하고 있어 GCC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GCC와 FTA 추진

은 긴요하다. 우리나라와 GCC FTA 협상은 그간 3차례 협상이 이루어졌다. 당초 2009년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석유화학산업 등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기가 늦춰졌다. 우리나라의 GCC와의 FTA 추진은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체결을 추구함으로써 GCC의 산업 다각화에 참여하는 기반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GCC국가들과의 협력확대를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GCC국가들은 그동안 축적한 페트로달러를 기반으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변화된 정치·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GCC국가들과의 고부가가치형 협력을 위해서는 중동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축적을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 환경 변화로 아프리카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신지역주의적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정치·경제 분야의 주요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기구 창설을 목표로 과거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를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으로 진화·발전시켜 평화 및 안보 체계의 등장과 아프리카의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고, 이와 함께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개발을 위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파트너십(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한편 아프리카연합(AU)의 주도국가인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분쟁해결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UN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 진출 등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아프리카의 국제위상 제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은 21세기 들어 정세 안정과 개혁·개방정책을 바탕으로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자원·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또한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지역 교역량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나 2001년 46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량이 2008년에는 134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여 3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무역 수지는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에는 5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잠재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전략은 매우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의 역내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의 틀을 설정하여 국가별·소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치·외교적 및 경제·통상적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프리카 내에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공급선의 확보와 원유 공급지의 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부존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연구를 확대함은 물론 정상외교의 정례화를 통한 정부주도의 에너지 자원관련 사업 발굴 및 남아공,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콩고 등 에너지 자원 부국들에 거점공관의 외교 인프라 확충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프리카 에너지 자원외교에 있어서 세계 주요국들의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게 결합 및 재구성함으로써 전략의 실효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에 있어서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를 통해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실효성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창출을 바탕으로 한류가 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저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아프리카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대 아프리카 문화외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 중남미

중남미 지역은 총 33개국, 인구 5억 7천만 명, GDP 3조 3천억 달러, 교역규모 1조 5천억 달러의 신흥 유망시장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대아시아 협력관계 강화에 힘입어, 향후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는 풍부한 자원 및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유망 거대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투자가 최근 5년간 3배가량 증가하며, 2009년 중남미는 제2위 흑자 지역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한국은 상호호혜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외교의 적극 추진을 비롯하여 한·페루,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등 양자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MERCOSUR 등 다자경제기구와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남미 지역 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신시장 개척을 위한 프런티어 차원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교류, 언어, 음악, 영화, 춤 등의 문화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중남미 실리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연례포럼으로 시작한 ‘한-중남미 경제협력 포럼’과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의 모범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남미 문화 포럼’ 등으로 보다 다양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7. 협력 네트워크의 단계적 실천방안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밀한 대외전략으로서 협력 네트워크 외교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협력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협력외교와 21세기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개념의 결합으로 과도기적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외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직도 엄중한 동북아 안보위기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 국한되지 않고 변화된 한국의 국력에 걸맞는 대외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인 것이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부터 출발한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추진은 양국 간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한국 외교활동의 안정과 확대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동북아 주요국과도 양자관계 심화를 위한 협력외교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북아 3국은 역사적 또는 정치체제적 제약으로 인해 본격적인 양자 협력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경제통상·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간극을 최소화하고 한국에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북아 차원의 다자 간 협력관계도 심화될 수 있다.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은 각 양자관계의 협력외교와 병행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은 네트워크적 접근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익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양자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권력은 연계의 범위와 집중도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이 세계의 제반 문제에 대해 의제를 제안하고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선적인 대상은 기존의 다자회의체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등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UN 등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추진을 통해 한국은 21세기 세계 10위권의 외교강국으로서 성숙한 세계국가를 달성할 수 있다. 성숙한 세계국가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동북아, 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적 문제를 제안하고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이다. 물리적 국력을 뛰어 넘어 지혜로운 국가전략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달성하는 것이 성숙한 세계국가인 것이다.

제 5 장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제5장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1. 이명박 정부의 외교 비전과 ‘포괄적 실리외교’

가. 포괄적 실리외교의 배경 및 목표

이명박 행정부가 외교의 전략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는 포괄적 실리외교는 외교 대상의 포괄성, 외교 이슈의 포괄성 등의 포괄성과, 국익 규정의 실리성을 지시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외교이익이 다변화, 확장되면서 상대해야 하는 국가들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외교무대에서 다루는 이슈 역시 다양화되었다. 국가의 생존에 핵심적인 군사적, 안보적 이익은 물론 경제적 이익이 외교의 중요 이슈이지만, 점차 문화, 국가의 위상, 국가이미지 등 다양한 외교이슈가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는 정부 출범 초기 냉전적 이념 대립을 극복하고 이념외교를 지양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한 부분이 크다. 그러나 점차 외교의 대상과 이슈범위가 확대되고, 한국이 차지하는 국제정치에서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포괄적 실리외교의 방향도 21세기적 이슈범위에서의 지구적 중견국 외교로 방향이 선회하였다. 그러할 경우 단기적, 물질적 이익을 넘어선 중견국으로서의 장기적, 소프트 파워 외교도 중요한 실리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포괄적 실리외교의 방향은 계속 변화, 확대일로에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변화에 예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제한적 성과만을 거두게 될 것이다.

* 본 내용은 전재성·김병로·박정란·최진욱·김한성,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10-15-05)』 연구를 요약한 것임.

나. 포괄적 실리외교의 추진 내용

21세기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국제경쟁, 그리고 넓어지고 있는 이슈영역들, 다변화되고 있는 행위자들을 고려하면 향후의 경쟁은 과거의 군사력, 경제력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그리고 경제대상을 다변화하고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다자·양자 경제외교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더욱 어려운 점은 무조건 눈에 보이는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각 분야별 실리외교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실리외교의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다양한 대상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하향식 전체 밑그림도 필요한 것이다.

냉전적 상황과 탈냉전 초기의 이념외교에서 자유로운 상황을 확보하게 되면, 이후 보다 포괄적이고 실리 추구의 외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현 행정부는 그러한 단계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일지 중대한 기로에 있는 행정부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포괄적 실리외교를 이념외교의 극복, 주변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관계설정,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어젠다 개발로 잡아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새롭게 중시되는 영역에서 구체적인 외교적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단계에서 한미 FTA를 체결한 것을 넘어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FTA 네트워크를 추진하게 되었고, 자원외교나 에너지 외교에서도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국가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자원수입로의 다변화나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같은 대책이 중요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내 지식산업 강화 및 상대지역을 중시하는 패키지형 에너지 외교가 중요해질 것이다. 기여외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ODA나 평화유지군의 규모를 증가하고 이를 위한 국내제도 정비가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발전모델을 다듬어 지식 수출과 평화유지를 위한 한국의 안보외교 비전 제시, 다자적 노력에서의 역할 강화 등이 중요해질 것이다. 향후 한국은 포괄적 실리외교의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을 조화시켜 나가고 행정부를 넘어선 장기전략

비전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포괄적 실리외교의 추진 상황

(1) 외교 의제의 다변화

21세기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국제경쟁, 그리고 넓어지고 있는 이슈영역들, 다변화되고 있는 행위자들을 고려하면 향후의 경쟁은 과거의 군사력, 경제력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그리고 경제대상을 다변화하고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다자, 양자 경제외교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더욱 어려운 점은 무조건 눈에 보이는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각 분야별 실리외교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실리외교의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다양한 대상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하향식 전체 밑그림도 필요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명박 행정부는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이슈영역을 경제, 자원, 에너지로 확장하여 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이슈에서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체계 확보, 그리고 국민적지지 확보 등의 과제를 새롭게 안고 있다.³²⁾

이명박 행정부는 포괄적 실리외교를 각 분야별, 그리고 각 대상국가 및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다. 외교분야별로 보면 기존의 주요 안보외교 및 대북 외교를 지속하는 가운데 외교 분야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살리기 외교, 에너지외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외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외교, 글로벌 문화외교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외교대상 지역의 확대

포괄적 실리외교의 추진과정에서 외교대상이 지리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일이다. 각 이슈별로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증가되며

32)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2010』 (서울: 외교통상부, 2010).

한국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에 주목하는 국가들이 새롭게 늘어나기도 한다. 한국의 국력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양면에서 모두 증가하면서 한국의 외교대상이 증가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세계 각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교적 성숙도와 전략적 준비도이다. 외교적 지평을 치밀한 전략 없이 확대 일변도로 넓혔을 때, 실리를 추구하는 노선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아시아 외교에서 동북아에 한정되어 있는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포괄적 실리외교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현정부는 신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외교 등을 강화해 나감으로 외교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에너지 협력외교의 현황과 평가

가. 현황

21세기 외교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정치군사 문제에서 통상문제로 전환되었고 에너지 자원 외교로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은 에너지 민족주의 경향까지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국제적 기후협약의 체결과 그린에너지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으로 에너지 외교는 단순한 에너지 확보 경쟁을 넘어서 경제와 안보, 국제규범 등을 고려한 복합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커졌다.

1977년 제1,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외교를 추진한 한국은 1978년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며, 탈냉전 이후 에너지 문제의 안보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에는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에너지기본법 제정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등 에너지 외교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직후 ‘포괄적 실리외교’를 외교안보 비전의 전략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2008년 4월 외교통상부장관 직속으로 에너지

자원대사 직책을 신설, 국무총리로 하여금 자원외교를 총괄·지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 사용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린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2008년 9월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기 위한 핵심전략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2009년 1월 30일에는 에너지기본법을 개정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착수했다. 또한 2009년 12월 27일 UAE에 400억 달러 원전수출이 확정됨으로써 한국형 자원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2010년 6월 15일 터키와 원전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2010년 8월 26일 볼리비아 대통령과 리튬개발 MOU 체결 등 포괄적 실리외교라는 전략목표 하에 에너지·자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08년 현재 96.4%에 달하여 거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에 87.9%에서 1994년에 96.4%로 증가한 이후 줄곧 현재와 같은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원 가운데 원유소비량은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높은 중동의존도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2008년 현재 86.3%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00년 76.8%에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5-1> 에너지 수입의존도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에너지 수입의존도(%)*	87.9	96.8	97.2	96.6	96.5	96.5	96.4
원유 수입중동의존도 (%)	74.3	77.9	76.8	81.8	82.2	80.1	86.3
석유 의존도(%)**	53.8	62.5	52.0	44.4	43.6	44.6	41.6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주찾는 에너지통계』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원자력발전 제외; **1차에너지 소비량 중 석유류 소비비중

이처럼 부족한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유전개발이나 자원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투자의 총규모로 보면 2005

년 11억 달러에서 2006년 20억 달러, 2007년 32억 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59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확보한 유전에서 원유와 가스를 직접 생산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비율인 ‘자주개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2007년 4.2%에서 2008년 5.7%로 높아졌으며, 2009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9%로 증가하였다.

나. 평가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다원화 정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원의 중동의존도(86.3%)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에너지 다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02년의 석유·가스에 대한 자주개발율이 2.8%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5.7%, 2009년에는 9.0%로 상승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해외의 유력한 에너지 거점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한 국가에 맞춤형 자원외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개발 경험이나 정보·과학기술, SOC 건설 등을 특정 국가에 제공하고 한국이 필요로 하는 유전개발 등을 확보하는 맞춤형의 자원외교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협약 체결 이후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과학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형 자원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다.

셋째, 그러나 에너지 외교에서 한국은 정치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한·러 간 체결한 가스개발 협정이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으며, 한국이 대 러시아 에너지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러시아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보다 심각한 고찰이 요구되며 그에 상응하는 신중하고 내실 있는 에너지 외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10년 7월 발생한 리비아 ‘스파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효과적인 에너지 외교를 위해서는 국제정치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 향후 과제

향후 과제로는 첫째,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선을 아프리카, 러시아 등 석유에너지 수입국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특히 해외 유전 개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개발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전략사업(건설, IT)을 연계하는 맞춤형 내지 패키지형 에너지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에너지 외교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기술과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3. FTA 체결 현황과 평가

가. 현황

양자 혹은 다자 간 교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오늘날 세계 교역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GATT 체제 하인 1947~1994년 동안 합의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총 91개에 불과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등장한 1995년에서 2010년 4월까지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185개에 이른다. 이처럼 WTO가 출범한 1990년대 이후 FTA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FTA의 확산에는 다자 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DDA의 난항과 경쟁국의 FTA 체결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 주요한 원인으로 이야기 된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인도, EU 등과 순차적으로 FTA 체결을 완료하였다. 특히 한·EU FTA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는 교역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 5대 주요 교역대상 국가/지역(중국,

미국, 일본, EU 및 ASEAN) 중 3개 국가 및 지역(ASEAN, 미국, EU)과 FTA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게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쟁 상대국들의 잇따른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가 역외국으로서 남을 경우 교역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였다. 또한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존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FTA 추진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우리경제가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지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만이 남게 되었다. 중국, 일본과의 FTA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이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민감품목에 대한 양측의 부담과 정치, 외교, 역사적 갈등 등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평가

우리나라는 FTA 후발 참여국으로 지난 10여 년간 성공적으로 FTA를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최대 시장인 미국 및 EU와의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ASEAN, 인도와의 FTA를 모두 완료한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 교역에서 FTA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상대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4%에 불과하며,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과 EU를 포함하더라도 총 교역의 약 35%에 그친다. 이는 전세계 교역에서 FTA 체결국 간 교역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우리나라 총 교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가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했고,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인 일본

과의 FTA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은 이행 혹은 완료된 FTA의 수적 증가에는 기여했으나, FTA 이행에 따른 평가와 효율적인 FTA 이행에는 다소 소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향후 FTA 추진 전략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 향후 과제

경제적 분야에서 WTO와 같은 기존의 다자국제경제기구 뿐 아니라 FTA 네트워크를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이해조정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FTA의 대상을 새롭게 설정하고 가장 유리한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FTA가 경제이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 비전과 총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외교부서와 경제, 산업부서, 그리고 문화부서까지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FTA의 실익을 계산하고 이를 외교협상과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부 내 FTA 거버넌스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FTA는 기업은 물론, 노동계, 각종 이익집단과 직업단체들, 그리고 지역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는 이들 비국가 행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취합할 수 있는 지식체계 및 국내협상체계, 그리고 이들이 FTA 협상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전략적 관계설정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기여외교 현황과 평가

가. 현황

기여외교로 간주되는 국가 행위는 다양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의 기여외교 행위는 다음의 두 가지 이다. 하나는 개발(development)을 목적으로 빈곤국가, 개발에 관계하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s)에 자금(물품과 용역 포함)을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군대 파견,

구체적으로는 UN 평화유지활동(UNPKO: UN Peace-keeping Operations)에 참가하는 것이다.³³⁾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된 기여외교의 내용도 공적개발원조와 평화유지활동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기여외교에 대한 강조는 관련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고, 2009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10년 1월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 및 공포되는 등 가시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여외교 추이와 환경 변화를 정리해 보면, 첫째, 개념과 참여 주체의 다차원화, 둘째, 국제적 기여의 장기적 국가이익으로의 환원 인식 확산, 셋째, 국제적 규범 준수 및 개별국가 특화이미지 동시 구축, 넷째, 국내 외 쌍방향 외교 확산으로 분류된다.

(1) ODA 현황

우리나라의 개발원조는 양자 간, 다자 간으로 나누어지며 양자 간 원조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와 관련한 법률은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이 있다. 2009년 12월 29일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0년 1월 제정 및 공포를 거쳐 7월 발효되었다. 또한 한국이 2009년 11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ODA 정책은 여타 OECD 회원국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더욱 부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국의 ODA 지출은 2005년 7억 5,200만 달러로 처음 GNI의 0.1%를 넘어선 이래, 2009년 기준 국민순소득(GNI) 대비 약 0.11%이다. 규모와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이 원조의 성격이다. 원조의 성격 내지 질적 수준을 논의할 때, 대표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구속성·비구속성 원조, 유상·무상원조의 비율을 들 수 있다. 구속성 지원과 유상원조의 비중이 여타 DAC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33) 강선주, 『신정부의 기여외교: 공적개발원조(ODA)의 과제와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p. 2.

(2) PKO 현황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이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2010년 4월 발효되므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관한 최초의 국내법이 마련되었다. 본 법안에는 유엔 PKO의 정의 및 임무수행 원칙, 상비부대 설치 근거,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방식, 파견 절차, 기간 연장 및 종료, 대국회 보고 부처 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이 참여해 온 평화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유엔이 직접 주관한 평화유지활동, 둘째, 유엔이 주관하지 않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평화강제 활동,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더라도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평화강제활동이 그것이다. UN 미션 뿐만 아니라 Non-UN 미션까지 포함하여 2010년 10월 현재 11개의 PKO에 총 645명이 참여하고 있다.³⁴⁾

나. 평가

첫째, 기여외교를 추진, 실행해 나감에 있어 목표의 명료화와 전반적 지향의 일치를 꾀하는 것은 기여외교의 효율화는 물론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아직까지 목표의 모호성과 목적 간 상충,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주요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둘째, ODA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하게 되므로 DAC의 동료평가에 대한 대비, 각종 매뉴얼, 권고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분야 이슈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 적용 및 실행은 DAC 동료평가를 대비한 한국 ODA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ODA, PKO 모두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 개선도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ODA의 경우 특히, DAC가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구속성 원조(tied aid)와 유상원조 비율이 높다는 것, GNI 대비 낮은 ODA 비율 등은 ODA의 질적 수준을 저평가하는 주요 요건이 되어 왔다. PKO에 있어서는 경제적 기여 대비 낮은 수준의 병력 공여, 한정된 공적

34)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구성원 중심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넷째, 기여외교를 구성하는 ODA와 PKO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며,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ODA 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는 중요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PKO나 ODA 활동 모두에서 민간 전문인력 참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 향후 과제

우선 기여외교 추진 목표를 명료화하고 단기, 중장기적 비전 제시를 통해 기여외교에 대한 대국민 지지와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DAC 가입으로 한국이 OECD/DAC의 정식회원국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DAC의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동료심사를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PKO의 임무 확대, 활동 유형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PKO를 군사작전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민관합동 국제평화사업으로의 변모와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기여외교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국제적 규범의 준수와 국제적 이슈를 기여외교 체계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한국형’ 기여외교는 무엇이며, 특화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여외교를 구성하는 ODA, PKO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여외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여외교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개념 이해를 통한 기여외교 추진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기여외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지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현재 정부차원에서 기여외교 추진 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단기, 중장기 실천전략 수립은 미흡한 상황이다. 기여외교의 목표 수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시계열적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사회에서의 PKO와 ODA가 추구하는 이념, 이슈의 다차원화는

대내외 다양한 정책과의 접촉면이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우리나라의 PKO, ODA 실행에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환경, 인권, 성평등, 인도주의 가치 등 다차원적인 이슈가 반영되고 있는 만큼 각 이슈별로 기여외교로써 실행되기보다 유관 정책 간에 접촉면을 확장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기여외교를 구성하는 ODA와 PKO의 규모를 확대해 나감에 있어 질적 수준 제고와의 조화는 기여외교에 대한 신뢰확보와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충해 나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5. 재외동포 지원외교 현황과 평가

가. 현황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로 정의된다.³⁵⁾ 즉,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구성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국적 동포의 개념은 약간 복잡하다.

재외동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적게는 560만 명에서 700만 명까지 차이가 난다. 외교통상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한국은 전세계 150여개국에 6,822,606명의 재외동포가 있다. 이 680만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국의 국적을 획득한 동포와 직계 존비속 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 중인 유학생, 주재원을 모두 포함하는 수이다.³⁶⁾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 230만 명, 중국 230만 명, 일본 90만 명, 러시아(독립국가연합) 53만 명 등 주변 4대국에 거주한다.³⁷⁾

35) 「재외동포재단법」, 제정 1997. 3. 27/ 개정 2005. 3. 31/ 시행 2006. 4. 1

36) 입양과 해외결혼, 밑입국 등을 포함할 경우 재외동포의 수는 7백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광규 교수는 주장한다. 진희관,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 변화 및 민단-조총련 관계개선 방안 모색” 『통일문제연구』, 39호 (2003), p. 129.

37) 러시아 전체 동포 수는 18만 명으로, 이중 절반 정도는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23만 명, 카자흐스탄에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 재외동포 수는 이탈리아(6,000만 명), 중국(2,500만 명), 이스라엘(1,800만 명), 멕시코(1,800만 명), 우크라이나(1,200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이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480만 명)나 일본(260만 명) 보다도 많은 수이며, 모국거주 인구(남북한) 대비 해외동포들의 비례로 보면 거의 10%로, 이탈리아, 이스라엘 다음 가는 높은 비율이다.

한국국적을 보유한 채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관할권은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고, 이들은 ‘외교적 보호’ 또는 ‘영사 보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동포들은 우리 정부의 ‘지원’의 대상이 된다.

냉전의 종식은 재외동포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86년 아시안 게임 개최, 1988년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사회주의권과 교류를 시작한 한국은 1990년 소련과의 수교,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까지 중국과 소련의 교포는 재외동포에 집계조차 하지 않던 정부는 1991년 『외교백서 1991』에서 중국 192만 명, 독립국가연합 44만 명을 공식적으로 재외동포에 포함시켰다.

1990년대부터 민족교육의 대상에 사회주의권 동포가 포함되었으며,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심지어 현지인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냉전이후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1993년 청와대에 국제비서관이 신설되어 주요임무로서 재외동포업무가 포함되었다.

나. 평가

첫째, 정부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포사회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을 전개했다기 보다는 남북 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상대방을 견제하고 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에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를 ‘외국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였으며, 70년대까지는 ‘기민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남한의 재외동포정책은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재외동포들이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적 발전

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거주국 내에서 권익신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적 목표로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된 국가의제로서 종합적인 정책목표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계획이 부족하다. 재외동포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과 혼선이 야기되기도 한다.

다. 향후 과제: 한국 중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

한민족 공동체는 전지구적으로 하나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별국가별로 상이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개념은 민족공동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민족공동체가 한국중심이라면 수평적 네트워크는 여러 형태의 세계속 한인들이 각지에서 하나의 중심을 형성하면서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의 혈연적, 문화적 공동체이다.

6. ‘포괄적 실리외교’ 강화방안

가. 기본 방향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는 정부 출범 초기 냉전적 이념 대립을 극복하고 이념외교를 지양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한 부분이 크다. 그러나 점차 외교의 대상과 이슈범위가 확대되고, 한국이 차지하는 국제정치에서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포괄적 실리외교의 방향도 단기적, 물질적 이익을 넘어선 중견국으로서의 장기적, 소프트 파워 외교도 중요한 실리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향후 포괄적 실리외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①에너지 협력외교강화, ②FTA체결다변화, ③기여외교 확대, ④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동포 활동지원을 외교의 기본방향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축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역할 배분과 협력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들 간의 협력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제 정비와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설정이 중요하다.

나. 세부 실천방안

(1) 단기 실천방안

① 에너지협력외교

첫째, 관-민-연-지역전문가-진출기업-현지 거주 한인-NGO 등으로 구성되는 조직(포럼 등)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외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석유시장, 석유비축, 신재생 에너지 등 주요 협력 사업에 중요한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추진을 적극화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자원외교수행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자원부국들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기술 제공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자원외교와 경제협력과의 연계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자원만 확보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국제정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② FTA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FTA 향후 추진 방향의 단기과제로는 한·미 FTA 및 한·EU FTA 이행 준비와 효율적인 FTA 이행 노력을 들을 수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 비준과 더불어 이들 FTA의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과 EU는 모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통상협정의 정확하고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에서 원산지규정이나 여타 협정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FTA나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특히 발효 초기에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서 우리나라 주요 수혜업종으로 분류되는 섬유·의류제품이나 자동차는 미국 관세당국의 특별 관리품목이며, 특히 섬유·의류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EU도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없을 경우, 발효 초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나 상대국 수입상들의 FTA 활용 의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칠레 FTA를 제외한 여타 FTA의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나 한·EFTA FTA, 한·ASEAN FTA 모두 50%를 밑도는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한·ASEAN FTA의 경우 우리나라 대ASEAN 수출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체결된 FTA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FTA의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체결 FTA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행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기여외교

단기적으로는 국제적 규범과 대비해 현재의 기여외교 체계와 내용 현황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제적 규범을 적용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어느 정도까지의 기여수준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될 수 있는 특화 방안의 모색이다.

지금까지의 PKO와 ODA에 대한 질적 수준과 규모에 대한 전반적, 분야별 집중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규모 증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사회에서의 PKO와 ODA의 개념이 다차원화되면서, 그에 부합한 다양한 인적구성원의 발굴과 이들에 대한 역량 증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적 기여가 추구하는 바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시키

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방안을 확산시켜나가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④ 재외동포지원외교: 중점 외교과제로 선정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본국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주변국의 한민족문화 훼손과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동북아 국가 중 다행히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은 국가 간 관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중기 실천방안

① 에너지협력외교

첫째,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화인 대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형화 내지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자원 개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내지 확보도 필요하다. 둘째, 한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자원을 수입하는 외교를 펼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원전수출을 촉진하는 외교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외교의 기반 구축을 위해 인적 교류 확대 및 음악·영화·종교·스포츠 등 문화교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넷째, 자원외교를 위한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외교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 지역외교관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② FTA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추진은 우리나라 FTA 추진 정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 및 일본과의 FTA는 양자 간 FTA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장점과 FTA 추진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자 간 혹은 3국 간 혹은 다자

간 관계에서 **FTA**를 추진할 것인지, 양자의 경우에 중국, 일본 중 어느 국가와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혹은 동시에 추진할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방향정립이 결여되어 있다. 방향성의 결여는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내 기업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춰 **FTA**에 대비한 적절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일본과 어떠한 방식으로 **FTA**를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향 제시는 향후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③ 기여외교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여외교 분야에 대한 탐색을 단기적으로 추진한 이래 중기에 들어서게 되면서는 국제적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기여외교 개념 및 구조 구축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에는 기여외교 체계와 내용에 대한 질적 개선과 규모 증대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속도를 내 가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ODA**와 **PKO** 접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PKO** 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체납율을 줄여가면서, 분담율을 늘려 나가되 인적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면서 그 수준을 신중하게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기에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고려한 참여자의 확산과 역량 증진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PKO**, **ODA** 개념 및 활동이 다차원화되고 있다는 것과 한국형 **PKO**, **ODA** 개념에 부합한 참여자의 확산과 역량 증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국제적 기여에 대한 대국민 이해 및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는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PKO**와 **ODA**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와 지지 여론을 정착시키면서 기여외교 추진과 지속의 동력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여외교를 통해 상대국의 여론을 호의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모색되고 적용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④ 재외동포지원외교

재외동포업무를 외교통상부업무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외동포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현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부처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변화를 위한 재외동포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즉, 남북 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3) 장기 실천방안

① 에너지협력외교

첫째,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21세기의 개발모델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의 하나로 한국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육성하고 있으며, 태양광·풍력·지열·조력·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보화기술, 경제개발경험 등 한국의 자원외교에 필요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적 브랜드를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② FTA

FTA 추진과정에서 DDA 등 다자 간 협상에 주는 시사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FTA는 WTO 등 다자 간 협상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FTA를 통한 다자 간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체결 FTA 양허를 반영하여 다자 간 협상에서 한국 상품양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향후 한·미 FTA 및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민감품목 특히 농축수산업에 대한 실질관세율에 대하여 재고하고 향후 FTA 추진 및 다자 간 협상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FTA 추진에 대한 평가는 주로 개별 FTA의 주요 내용이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FTA를 통합하여 수평적으로 그리

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특히 상품부분의 경우, FTA 체결 결과를 반영한 향후 실질관세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FTA에서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과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보호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 한국의 기존 FTA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향후 DDA나 APTA(아시아-태평양 통상협정), GSTP 등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통상협정에 반영함으로써 상대국 시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최대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③ 기여외교

첫째,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기여외교 개념과 구조를 확립하고 대외적 파급력을 확장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선진기여외교가 새로운 국제적 외교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달되는 체계 구축이 민·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PKO, ODA의 경제적 분담금에 있어서도 미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장기적 규모 수준을 결정하되 한국의 특화 부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선진기여 수준으로 도약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참여자 발굴과 역량 강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국내의 기여환경변화를 추적하면서 이에 부합한 기여외교 참여자 발굴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통일과정에 다가서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통일 패러다임에 부합한 참여자 발굴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적 기여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지지를 넘어 기여외교 선진문화가 창출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적 의미뿐 아니라 기여외교 상대국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다가서는 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대북 개발협력을 위한 국내 역량 결집과 지지 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재외동포지원외교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화해와 개방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소재로 삼아야 한다. 문화적 한류와 한민족 수평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화해·개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를 통일 한국의 이미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사회는 남북한 보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남북분단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은 남북한 보다 오히려 이질감이 적다. 민족공동체 형성에 재외동포가 포함됨으로써 남북의 이질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체육, 문화, 교육이 핵심 요소이며, 재외동포 간 공동행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민족 정체성이 반드시 한국의 정체성이 아니고 각국에서 고유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 수평적 네트워크차원에서 한상대회와 같은 한민족 공동 행사를 한국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등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6 장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제6장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1. 서론

오늘날 국제안보환경, 특히 21세기 국제안보위협 속성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표출하고 있다. 과거의 위협이 ‘국가 대 국가’라는 군사안보 위주의 전통적 위협으로 주로 지정학적 구도에 근거해 있었다면, 오늘날의 안보위협은 전통적 위협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 등 위협의 성격이 기능적 측면에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안보 변화추세에 적극 부응하여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 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이나 억지 차원이 아니라 소위 ‘포괄 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적·지구적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나름의 안보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국가의 생존을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국가방위능력의 배양에도 주요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컨대 한국은 한편으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생존과 성장 발전 능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안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 ‘민주화’에 이어지는 ‘선진화’를 주요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역시 이른바 ‘선진 안보체제’ 구축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의 역량에 부합하는 안보정책을 추진하여 성숙한 세계국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정책의 체계화와 이에 기초한 ‘선진 안보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적실성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 본 내용은 이수훈·김일수·김근식·이수형,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10-15-06)』 연구를 요약한 것임.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체계화를 통해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 안보 쟁점에 대한 문제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선진 안보체제라는 우리의 안보·국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례로 북핵 문제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쟁점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본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이 현재 및 미래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안보·국방 쟁점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종합적인 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것이다.

2.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선진 안보체제’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외교안보 비전과 ‘정의와 평화’, ‘공동번영’, ‘세계주의’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4대 전략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협력 네트워크 외교, 포괄적 실리외교,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방위역량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략환경 변화와 다양한 세계 안보위협을 고려한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구현하여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신장하고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더욱 기여하는 것을 선진 안보체제의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중점과제는 4가지로, ①선진 군사능력 확충, ②국방경영 효율화, ③대외 군사협력 확대, ④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 등이다.

선진 군사능력 확충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인 전략구상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한미동맹으로부터 비롯되는 양국 간 공동전력이 우리의 자주국방역량 강화 노력에 보완 및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한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합동군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합동성·통합성을 강화할 것이며,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증강과 연계하여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상비병력 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등을 통해 정보·기술 집약형 군 구조를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방경영 효율화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유사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여 조직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일 것이며,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 민간 위탁의 확대, 민군 협력 강화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문성과 효율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국제 방위산업 수출시장에 적극 진출토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대외 군사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국방외교의 외연과 깊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군사협력 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양자 및 다자 간 군사대화 및 협력관계 강화, 동북아 국가들과 공동훈련 및 군사대화를 추진하여 군사신뢰 구축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군사외교의 범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방위산업기술의 국제협력 및 대외수출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자 간 안보대화와 국제협력 체제에도 적극 참여하며, 특히 UN 주도의 PKO 활동과 기타 다국적군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국가간 전쟁위협 뿐만 아니라 국제테러·마약·해적행위·대형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과 대응능력 확충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침투 및 테러를 새로운 정보전 위협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동맹국과의 협력 및 민·관 차원에서의 교육훈련과 대비책 체계화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경제·금융·식량수급 분야에서의 안정적 국민생활 기반 보장 및 국민의 보건·위생 보호체계를 살피는 것도 군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분야에서 군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3. 군사능력의 현황과 평가

선진 군사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국방개혁의 틀 내에서 현재 병력규모 위주의 군구조를 정보·기술집약형 군구조로 발전시키면서 적정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상비전력 수준으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지휘구조, 부대구조, 유무형 전력구조, 병력 및 예비전력 구조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살펴보겠다.

가. 정보기술 집약형 군사력 건설

먼저, 지휘구조와 관련해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구조 개편의 경우, 지난 2년간 추진 실적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부구조 중 합동참모본부의 개편과 하부구조인 일부 육군의 야전부대 개편 및 이와 연동된 병력 감축 등을 들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개편은 2009년 4월에 기존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확대하여 산하에 7개의 전투참모단(참모부)을 편성함으로써 평시 작전을 수행하는 물론 전시 한반도 전구작전에 대한 지휘를 준비하는 조직이 되었다. 이 개편은 2015년까지 2단계 개편으로 마무리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사전 대비를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편된 현재의 통제형 합참의장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합참의장은 합동군사령관, 군령 보좌, 계엄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미 합참의장 파트너, 주한 미 선임장교(연합사령관) 파트너, UN군 사령관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시 미래의 역할은 상기 역할에 더하여 미 한국사령부(KORCOM)의 파트너 역할까지 해야한다. 따라서 현재의 합참의장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작전기획·준비·시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전비태세가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여러 개의 전구(theater)를 가지고 있어 합참과 통합군사령부가 적절한 임무분담을 하나 한국의 합참은 그 임무와 역할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둘째, 병력구조와 관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아울러 간부의 비율을 병사들의 수만큼 늘리는 문제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20년에 부사관이 13.5만 명으로 전체 간부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유급지원병(하사) 2.5만 명이 포함된 수치이다. 하지만 유급지원병 제도는 국방예산의 부담 증가와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지원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방어충분성의 논리로 생각해야 한다. 즉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과 전력증강의 진전상황, 그리고 미 지상군 증원전력의 투입 일시 등을 고려하여 육군의 병력 수에 대한 재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대구조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제시된 부대구조 개편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평시에 감소된 편성을 유지하다가 전시가 되면 증원하에 완편하는 개념이었으나, 앞으로 상비부대는 평시부터 정예화된 인원과 우수한 장비로 완전편성하여 즉각 전투태세가 가능하도록 완전성을 보장하고, 지휘계선을 축소하여 효율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육군의 야전부대 개편 및 이에 따른 병력의 감축도 2008년까지는 2006년에 마련된 국방개혁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9년 6월에 국방개혁안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상당 부분 변경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지상군의 경우 현 수도군단을 해체하고 수방사에게 김포축선 방어임무를 부여한 점, 전시 10개 사단 추가 창설, 동원사단 해체 취소, 지작사의 창설 순연, 상당한 부대개편 계획의 시간적 순연 등을 들 수 있다. 해군의 경우는 항공사령부를 항공전단으로 조정하고, 공군의 경우는 전술항공통제전대를 전술항공통제단으로 조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체 병력을 50만 수준에서 51만 7천으로 다소 증가시켰다.

이러한 병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방어충분성의 논리로 생각해야 한다. 즉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과 전력증강의 진전상황, 그리고 미 지상군 증원전력의 투입 일시 등을 고려하여 육군의 병력 수에 대한 재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 전력증강 후 부대해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해체는 전력증강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군단을 해체하는 것도 서부 축선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고 한국 지형에 덜 적합한 전차 위주의 기동군단을 2개 창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9년 수정된 계획에 의하면, 병력감축이나 부대개편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불과 5년 동안에 집중됨으로써 차후 계획의 실현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계획의 재수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구조이다.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 개편은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 및 비대칭 위협에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과 실시간 전장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통합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지휘통제·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생존성과 신뢰성이 증대된 네트워크중심전 수행능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는 장거리 정밀타격과 지·해·공 입체고속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호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첨단 정보화 전력 구축은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대양해군’과 ‘항공우주군’이란 구호 대신에 주적을 상대로 하는 군사력 건설이 더 절실했다. 결국 군은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음향탐지 장비(소나)와 초계함의 레이더 성능개선, 소해(기뢰탐색, 제거) 헬기인 MH60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더불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전력증강 예산의 현실적인 제한과 북한 위협의 가시화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보다는 주적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증강으로 바꾸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즉 WMD, 대규모의 특수전 부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과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력을 건설하고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나. 무형전력의 공고화

먼저, 군 무형전력 교육 및 연구 측면이다. 군에서는 국가관, 역사관, 대적관,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정신전력 교육은 오히려 약화되어 왔다. 보수과정(초군반, 고군반, 각 군 대학)에서의 일반장교들에 대한 정신전력 교육도 육군을 제외한 해·공군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훈 초임장교에 대한 교육도 각 군마다 교육시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해·공군의 대위급 이상 정훈장교에 대한 교육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장교 및 정훈장교에 의한 정신전력 교육은 능력과 관심, 그리고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국군 TV 및 국방일보의 정신교육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5년 이후 리더십에 대한 열기가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의무를 넘어섬에 따라 정신전력에 대한 교육은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났으며, 해·공군은 리더십센터에서 리더십 교육과 정신전력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한편, 리더십 연구 기능 측면에서는 리더십 센터별 연구 인력이 분산되어 있고 기능이 미조정됨으로써 리더십은 그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센터별로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고 연구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장병 정신전력 시스템 재정비 측면이다. ‘안보상황에 부합된 장병 정신교육 강화’의 중점과제만으로는 무형전력의 공고화를 달성할 수 없다. 무형전력이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체계적인 무형전력 개발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병 정신교육 지도체계는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산하의 정신전력과에서 각 군으로 지침을 하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군의 정신전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정신전력과 리더십의 향상방안을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방대학교에 정신전력·리더십 개발원이 일부 연구기능과 정책개발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효과적인 지도감독과 예하부대 통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셋째, 장병 정신전력 시스템 재정비 측면이다. 병력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과연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나타난 병력구조 개편에 나타나 있는 적정 수준을 살펴 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50만 명을 적정 수준으로 판단했고, 이명박 정부는 51.7만 명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러한 판단에는 명목상 북한의 위협이 감소될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는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복무기간 18개월로는 국방개혁 수정안의 51.7만 명 충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2010년 국방예산 증가율 3.6%를 감안할 경우 국방개혁 2020의 소요액인 599조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소요예산의 부족으로 전력증강이 지연되는 가운데 복무기간마저 18개월로 단축된다면 현 안보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군사력 건설이 진행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 예비전력의 극대화

먼저, 동원체제 개선 측면이다. 동원체제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시 동원집행의 측면에서 전시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평시 동원자원관리 및 전시 집행이 이원화된 문제점이 있다. 현 동원령은 총동원 개념으로 총무 2중 사태 시 발령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전쟁직전에 발령됨으로써 군사적 전투준비 제한 등 동원시기 면에서 적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동원령 선포 지연 시 미 증원전력의 전개 및 비전투원 후송지원이 제한되고, “동원령 선포 = 전쟁 선포”로 해석될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총 동원령 발령 후에 전쟁 미발발 시 동원보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시자원동원법령은 전시대기법으로 평시 국가비상사태(국지도발, 재해·재난 등) 발생 시 국가자산의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둘째, 동원업무 담당부서의 조직과 기능 분산은 업무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저하시켜 전시 동원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예비전력업무의 기능 분산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예비전력 건설과 관리가 제한되는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동원제도에 있어서 국방부의 실제

적 역할은 병무청과 연계하여 병력동원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병력동원의 경우는 전·평시 2원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무청 계통의 전시 병력동원 체계 못지않게 평시 향방동원(국방부장관 발령)이나 향방소집훈련(수임군부대장 발령) 등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원기능의 체계적·종합적 업무수행과 상비군 지휘체계와 예비전력 관리체계의 연계 강화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전력 관리 및 운영체제 구축 측면이다. 첫째, 예비전력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역할이 아직 불분명한 측면이 다소 있다. 현재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설치소요 및 시기는 확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계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예비전력 관리기구에 운용할 예비역간부의 복무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 기구별 상이한 임무와 역할에 따른 예비역간부의 운용소요 및 인건비 등을 판단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제·개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예비군 훈련제도 및 여건은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전시에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일부 도심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화훈련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 등을 비롯한 미래 예비군 훈련체계의 발전이 요구된다. 2014년부터 권역별로 창설될 예비군 훈련대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넷째, 현재 예비군이 사용하는 장비의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장비 및 물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도별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병력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남게 되는 장비와 물자를 어떻게 전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4. 국방경영의 현황과 평가

먼저, 유사 중복 조직의 통·폐합과 조직의 슬림화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조직을 비롯하여 합참, 각 군 본부, 국직부대 및 기관을 진단하고, 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였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군에서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중앙경리단, 인쇄창, 복지단 등을 통·폐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병력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각 군의 근무지원 분야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하기 위해,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상 분야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사 중복 조직의 통·폐합은 단순히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다. 실용적 선진 국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생산성을 높이고 병력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이 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업무 특성상 군 조직의 개혁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유사 중복 조직의 통·폐합이 비전투 분야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유사 중복 조직의 통·폐합이 ‘국방경영의 효율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비전투 분야와 더불어 전투 분야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슬림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국방개혁의 주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의 슬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상급 부대 수준에서의 ‘슬림화’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각 군 본부뿐만 아니라 군단, 사단 수준의 전투지원부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조직의 슬림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조직이 개편된 이후 업무평가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인력과 기구를 지나치게 줄였다면 재보강해야 하며, 더 줄일 수 있다면 인력의 추가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간 경영방식 및 민간자원의 활용이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와 같은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군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유경쟁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 경영방식은 이전까지 비전문화된 인력에 의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던 군의 경영방식을 대체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은 전투지원 관련 조직에만 국한되어 ‘군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본래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개념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탄생한 개념으로써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단순히 군 조직에 민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운영개념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의 민간 경영방식 도입은 전투지원 관련 조직을 민간경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조직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분석결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조직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향상된 평가체계를 통하여 성과분석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보완이 요구된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전·평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현재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평가 조직과 객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925호)에서는 심의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민간 위탁의 확대와 관련해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자유경쟁 원칙에 기반한 경영방식을 우리 군에 도입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또한 비전투 분야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병력절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위탁은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원칙도 정립되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다. 고작해야 국방부 내부 문서인 ‘민간자원활용계획’이 전부다. 반면 미국 국방부에서는 A-76에 의거 경쟁위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민간 위탁이 10% 이상의 비용절감이나 1,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영국 역시 PPP 관련 법률을 근거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1997년 이후 17%의 비용절감과 80% 이상의 사용자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위탁 역시 원칙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과거 민간 위탁의 목표가 군 능력 부족 분야를 보완하는 것이었다면 현재의 목표는 ‘비전투 분야에서의 병력절감’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병력절감이 가능할 때, 민간 위탁으로 전환시킬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민간 위탁 확대는 노력의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위탁으로 전환시 인건비의 증가로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소요예산 증가를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방부 자체 검토 결과, 세탁, 물자수리, 시설관리, 정비창 단순 노무, 차량정비, 조정 및 제조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시 현행 인건비 305억 원보다 311억 원이 증가한 61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위탁 운영체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국방 민간 위탁은 사업국, 각 군 소관사업과 계획예산관실 소관사업으로 구분되어 이원화 운영되고 있다. 분리 운영되고 있는 민간 위탁 사업은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제한되고 영세한 민간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운영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민간 위탁업체 선정과 관리에 따르는 노력의 중복을 피하고 방대한 민간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 민간 위탁 관련 분야 지정과 예산 편성, 관리, 평가 등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Control Tower**가 필요하다.

또한, 민군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군의 민간자원 활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자원의 활용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군은 자족적 체제로서 민간자원의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나 ‘국방개혁 2020’의 시행과 함께 민간자원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추진한 지금까지의 성과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군수품의 45%를 상용 전환하여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였으며, 군 물류체계 개선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서 민간자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도로공사 등과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민·군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이를 확대한다면 민·군 협력의 강화는 물론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원 활용의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이다. 과거의 방위산업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가 지배적이었으며, 국방전력 보유를 위한 내수조달이 우선시되고, 잉여자원은 수출한다는 마인드를 견지함으로써 수출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였다. 또한 수출 전담 지원조직의 부재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수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복잡한 지원절차와 다양한 의사결정 경로로 인해 방산수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행보는 이전과는 차별화된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 협의회 규정,’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 ‘방산물자 등의 정부 간 판매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방산수출의 기틀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 협의회,’ ‘방산수출 촉진회의,’ ‘방산물자 교역 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 시스템은 부처별 방산수출 지원 관련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방산수출 지원에 한계가 있다. 방산수출을 효과적으로 비원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산수출 정책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 캐나다 등은 민간에서 주도하여 방산업체 지원과 방산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방부가 기술개발간 산·학·연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민·군 교류를 확대하여, 개방형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민간 부문과의 교류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에서 특화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아직 국방기술 선진국들에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수준이다. 2009년 현재 전체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6%인데, 이는 이전보다는 증가한 수치이지만 국방기술이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국방개혁 202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안정적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과학기술을 향상시켜 국가 경제발전의 신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비가 계획대로 편성되어야 한다.

5. 포괄안보 역량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먼저, 안보환경과 안보 성격이다. 21세기 복잡한 국제안보환경에서 전통적 안보의 성격은 과거와는 달리 주요 국가들 간의 무력 충돌의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 간의 경쟁구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 간의 힘의 이동이 정중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힘의 이동은 2008년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보다 부각되어 왔다. 요컨대, 21세기 전통적 안보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주요 국가들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된 반면, 이들 국가들은 불안정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 걸친 권력의 증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비전통적 안보의 중요성 부각이다. 20세기가 국가 중심의 국제관계로 전통적 안보위협이 중심이 되었다면, 21세기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전통·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상호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 이와 더불어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은 국가 중심의 전통적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국가 주권의 절대성이 부정되면서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해 온 다양한 쟁점영역(예를 들면 외교, 경제, 안보 등)의 탈국가화 현상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국제안보환경은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국가의 약화에 따른 내외부적 위협 증대, 안보 주체의 다양화와 초국가적·비대칭적 안보위협이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의 등장,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 등으로 국가 내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실패한 국가나 실패하는 국가에서 비롯되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국제적 테러리즘, 마약밀매, 인종분규 등 초국가적 위협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역량과 국제적 위상 변화이다. 과거 아시아와 세계의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와 중견국가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3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②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총 400억 불 규모의 UAE 원전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우리 원자력 역사상 첫 원전 수출의 쾌거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였다. ③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여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1998년 이후 최대의 국제수지 흑자를 이루었다. ⑤ 한미 전략동맹을 심화·발전시켰다. 정상 간 상호방문을 포함하여 한·미간 7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를 최상의 동맹 관계로 발전시켰다. ⑥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역내 협력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⑦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통해 범아시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맞춤형 협력관계 발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협력 관계를 내실화하였다. ⑧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통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고, 유엔 PKO 파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하는 등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해 국력에 걸맞는 기여 외교를 강화하였다. ⑨ 해외교류 편의 증진 및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VWP), 한미 대학생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시행, 일본·뉴질랜드 취업 관광사증쿼터 확대 추진, 해외봉사단 파견 추진 등을 확대하였다.

셋째,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이다.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비전과 전략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으로 한미 전략동맹을 제시하였고, 이에 양국은 한미동맹을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전략동맹은 21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전략 동맹의 핵심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동맹미래비전을 채택하여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추구하기로 합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비전을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한미 전략동맹은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외교안보비전과 전략의 산물이자 지난 정부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 놓았던 거시적 차원의 동맹조정을 큰 틀에서 매듭짓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정상회의를 통해 전작권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고, 곧 이어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후속협의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전략동맹 2015를 2010년 10월에 개최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10월에 개최된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지난 정상회의 합의사항 및 2+2 회의 합의사항들이 재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포괄안보 역량 구축 필요성과 발전 방향이다. 21세기 세계안보환경은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공존하는 가운데 상호작용을 통해 안보환경의 복잡화를 더욱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환경에서는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영역이나 쟁점에서 파생되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포괄안보 차원에서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안보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의 안보 좌표의 설정 문제이다. 이는 한국이 처해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탈냉전

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계기로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은 체제의 속성을 압도하는 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을 견인하고 있는 역내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 의심과 견제, 갈등과 경쟁의 관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동북아 다자주의 보다는 역내 양자주의의 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동북아 국제정치는 안보환경의 본질적 측면에서 동맹(미국·일본·한국) 대 동맹(중국·러시아·북한), 혹은 국가(미국) 대 국가(중국)의 역학관계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기본적으로 탈냉전의 보편경쟁체제가 아닌 지정학적 경쟁논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을 지속시켜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냉전적 속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발생한 소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동북아 안보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근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불안정의 평화를 뛰어 넘어 그 어느 때 보다는 불안정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및 성격을 유추해 보았을 때, 포괄안보 차원에서 한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전통적 안보위협 차원에 따른 국가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및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안보위협으로 작용해 온 북핵 문제 및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안보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방위 역량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생존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국가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경쟁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중견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국제관계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포괄안보 역량 구축 방향은 적어도 지역적·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하는 측면에서 포괄안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괄안보 맥락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는 크게 경제안보(에너지·자원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 그리고 사이버 안보 영역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한국은 포괄안보의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비국가 행위자들과의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접근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6. 대외군사협력의 확대와 발전방향

한국의 대외군사협력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의 대외군사협력은 양국 및 다자 간 지역적·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적 신뢰구축 및 국제사회의 협력관계 구축·강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다양한 국가이익 차원에서의 교류협력대상국 확대 도모, 그리고 단순한 친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교류 및 대화와 행동 등이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대외군사협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주변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을 통해 한국은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 그리고 협력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상대국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축되는 양국 간의 신뢰관계는 지역적·국제적 다자안보대화 등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기초가 되어 궁극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대외군사협력은 일반적으로 한·미, 한·중, 한·일, 그리고 한·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양국 간 대외군사협력의 형태는 ① 양국 국방장관 등 고위급 교류, ② 국방당국자 간 정기회담, ③ 부대 간 교류 및 공동 훈련, ④ 관련 방위연구소와 군관계 연구기관 및 유학생 교환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외군사협력의 필요성은 역외 지역과의 안보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역외지역으로는 크게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기타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도 현실적으로 한국이 향후 대외군사협력을 중시해야 하는 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특히, 인도

와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인도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은 지도 벌써 35년이 지났다. 그동안 양국 간의 교류·협력은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기축으로 다방면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양국 간의 협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미흡한 분야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안보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냉전기 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양국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사실상 양국 간 안보협력은 거의 전무하였으며, 탈냉전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안보환경에서 한국과 인도의 안보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양국은 상호 안보적 이익을 위해 안보영역에 있어서도 협력을 점차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7. 선진안보체제 구축방안

21세기 안보환경은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선진 안보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 안보체제의 기본개념은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구현하여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신장하고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더욱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은 ① 선진 군사능력 확충, ② 국방경영 효율화, ③ 대외군사협력 확대, ④ 포괄안보 분야 역량구비 등이다.

그러므로 ‘선진 안보체제’ 구축 방안은 위에서 제시한 4대 기본방향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의 보편적 흐름에 대한 부합성과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은 국제안보환경의 일반적 흐름에 부합하는 보편성의 원칙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우리의 특수성의 원칙 간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단기 차원에서 실시 방안은 ① 북한의 비대칭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대응능력 강화, 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

와 노력, ③ 국방개혁 2020의 미비점 보완 및 각 군전력 간 합동성 보강, ④ 민군협력 네트워크 구축, ⑤ 전략적 협착지점에 대한 인도와의 공동관리 방안 모색 등이다. 중기 차원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은 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전략개념 형성·발전, ②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 마련, ③ 대외군사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신뢰구축 조치 강구 방안 모색 등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차원에서의 세부 실천 방안은 ① 통일 한국을 고려, 중단기 차원의 선진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검토 및 평가, ②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군사력 통합의 문제, ③ 평화유지군의 유엔 차원으로의 격상 문제 검토, 4) 사이버(Cyber) 방위의 중요성 등이다.

제 7 장

결 론

제7장

결론

‘성숙한 세계국가’의 실현은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 분야를 포괄하는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미래 비전을 구성한다. 외교의 포괄적 영역에서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협력의 정신을 소홀히 하지 않는 외교 자세의 확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보 역량의 강화, 남북한 상생과 공영의 정신에 기초한 통일역량의 배양은 ‘성숙한 세계국가’의 실현을 위한 하부 과제들이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이 지니는 한계로부터의 진화를 도모하며 차세대 리더국가로서의 한국의 부상을 타진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있는 현실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협동연구는 5개의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의 이론적 및 경험론적 내실화의 작업을 수행한다. 5개의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추진 환경 및 기본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총론적 검토를 수행하는 연구와,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포괄적 실리 외교 분야, 안보정책 분야, 대북통일정책 분야 등 네 개의 부문별 연구로 구성된다. 부문별 연구들은 단기, 중기 및 장기의 시기별 구분 하에서 세부 실천방안의 강구에 초점을 맞춘다.

1. 추진연구의 내용

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향후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이한 견해들이 대립한다. 현 국제사회의 세력구도에 대한 이들 다양한 평가들은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의 범위, 한계 및 전망에 대한 논란들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평가들이 현존하는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등 압도적 경성 권력을 보유한 미국의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협조와 갈등이 중첩되는 국제관계의 동학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미국이 범세계적 차원에서는 독점적인 패권국의 지위를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지구상의 다양한 지역으로 미국의 관심과 힘이 분산되는 경우 이들 모든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면서 상이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패권의 지역적 분산을 감안하더라도 현존 동북아 역학구도에서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 자체를 의심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단지 중국의 현 성장궤도를 미래로 연장시킬 때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거나 혹은 쌍무적 세력균형을 형성할 시점이 미래에 도래할 수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미국의 점진적 쇠퇴와 중국의 꾸준한 부상은 의심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북아의 역학구도를 미국의 패권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관계로만 조명하는 것은 역학구도의 이해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 등 여타 행위자들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영향력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경우 명백히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북한이 부가하는 제약은 여전히 그 어느 국가보다도 지대하다.

이 연구는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상기의 시각을 토대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기본 전략 및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는 협력 네트워크 외교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포괄적 실리외교와 관련하여 정부를 축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거버넌스적 사고를 요청한다.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보편성과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성숙한 세계국가’의 비전과 정책과제들이 실현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요구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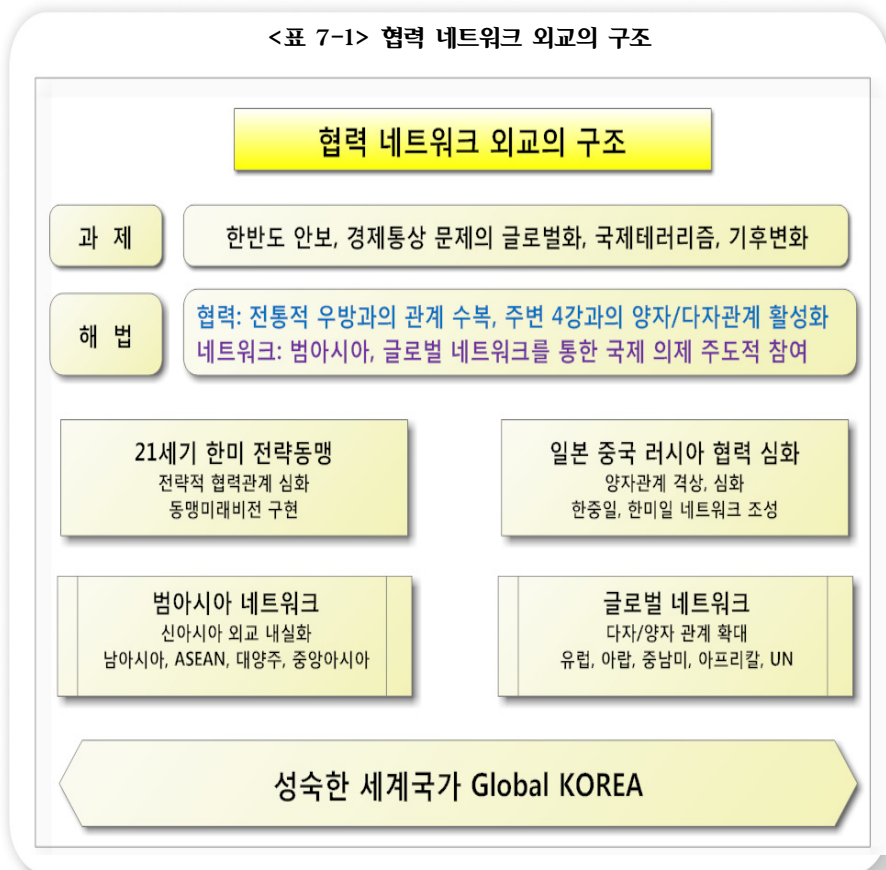
지적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에 달성가능한 단기적 과제들과 차후에 달성될 수 있는 중·장기적 과제들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협력 네트워크는 한반도의 안보문제, 범세계적 경제통상의 문제, 국제 테러리즘, 기후변화, 질병확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의 확대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국제관계의 주도적 국가로의 부상을 위한 외교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전략동맹 공고화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범아시아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의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외교적 역량의 강화를 지향한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범위는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가치까지 포괄하며, 그 대상은 한반도 주변에서 출발하여 세계 전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특성과 내용은 <표 7-1>에 요약된다.

시기별 실천방안으로는 한미동맹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동맹의 발전 기반을 공고화하는데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포괄적 협력동맹을 완성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역시 점진적 개선책을 통해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경우 6자회담 등 시범적 경우들이 운용되고는 있으나 해당국가들간의 이해편차가 현저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장기적 과제로 남겨진다. 범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역시 2018년 이후의 장기적 과제로 구분되어지며, 단기적으로는 민간교류 활성화와 지역 기여외교 등을 진작시킬 것을 요구한다.

<표 7-1>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구조



다.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포괄적 실리외교는 외교 이슈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며 실리의 극대화를 꾀하는 외교적 전략을 도모한다. 포괄적 실리외교의 확장된 이슈 영역은 <표 7-2>에 정리된다. 포괄적 실리외교는 외교의 영역 자체를 확대시키며, 이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비국가 외교 행위자들을 생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광범위한 외교영역을 국가가 홀로 담당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의 우위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포괄적 실리외교는 정부 부서간 및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이 연구는 에너지 외교, FTA 체결 외교, 기여외교 및 재외동포 지원외교 등 네 개의 현안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외교의 시기별 실천방안으로는 에너지 외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 전략에 주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진국에서의 공동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으로 관심의 전이를 꾀하고 있다.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체결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설정되고 있으며, 기여외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ODA의 지원액 증대에 관심이 맞추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기여외교의 패러다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 지원외교 역시 현재는 미진한 수준으로 한민족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의 강구를 요청하고 있다.

<표 7-2> 포괄적 실리외교의 장·단기 목표 구분

	단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
핵심 안보외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한미동맹 강화와 새로운 비전 제시 -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관계 재설정 - 안보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지역협력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다자안보체제 설립과 한국의 역할 강화 - 강대국 간 전략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중견국 안보외교 - 통일을 위한 안보기반 마련 외교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중인 주요국들과의 FTA의 협상 및 조인완료 - 경제발전 지속을 위한 에너지, 자원 개발, 수입의 다양화 및 다변화 - 중견국 위상 증진을 위한 기여외교의 새로운 자원확보 및 국내체제정비 - 해외동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식과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경제발전을 위한 FTA 네트워크 비전 제시 및 다자 FTA 추진 -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강화 - 에너지 외교를 위한 패키지 외교 전략 개발 및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지식 및 산업기반 확충 - 기여외교를 위한 한국형 전략비전 마련 및 국내적 지지기반 확보 - 해외동포 네트워크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국내체제 마련

라.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선진 안보체제’는 한국의 방위 역량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략적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세계 안보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장시켜서 자주적 국방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진안보체제’의 구현을 위해 제시된 4대 중점 과제는 선진 군사능력의 확충, 국방경영의 효율화, 대외 군사협력의 확대, 포괄안보 분야의 역량 구비 등을 포함한다.

‘선진 안보체제’의 확립을 위한 단기적 과제로는 북한의 비대칭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대응능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 유사조직의 통폐합 및 민군 협력 네트워크 조성, 국방개혁 2020의 미비점 보완 및 각 군전력 간 협동성 보강, 한국군의 기능별 전문화 등이 제시된다. 한편 중기적인 과제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전략개념 개발,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 마련, 대외군사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신뢰구축 조치 방안 모색 등이 언급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과제는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군사력 통합 방안 설정, 에너지 자원 보유국들과의 군사협력 확대,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 등을 포함한다.

마.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상생공영정책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및 행복공동체 등 3대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한다. 한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 핵문제라는 한반도의 핵심적 안보위협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 대북지원 패키지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구상 간에는 부분적인 내용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둘 사이의 연관성 논란을 일부 생성하여 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구상 사이에는 광범위한 내용적 일체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상생공영정책의 실천적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상생공영정책의 단기적 실천방안으로는 통일을 대비한 내부 역량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준비들이 포함된다. 3대 공동체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기별 실천방안은 점진주의적 공동체 건설을 제시한다. 평화공동체 형성의 핵심 이슈인 북한 핵문제의 경우 시급한 해법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쉽지 않은 과제를 인정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등은 장기적 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2. 협동연구의 종합평가

본 협동연구는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의 이론적 내실화와 현실적 추진 전략 및 실천방안의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협동연구는 다섯 개의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네 개는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포괄적 실리 외교 분야, 안보정책 분야 및 대북통일정책 분야로 구분되어 각기 분야별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및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므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꾀하고 있다. 나머지 한 편의 연구는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에 대한 총괄적 검토이자 네 개의 분야별 연구 결과들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4개의 분야별 연구에서 도출된 추진 전략과 실천방안들은 <표 7-3>에 통합적으로 정리된다.

이번 협동연구의 가장 큰 수확은 부문별로 추출된 추진전략과 실천방안들을 시기별로 구분 정리함으로써 차후 연구들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단기, 중기 및 장기의 시기별로 구분하는 데는 다소의 임의성이 내재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로 제시된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이 현실적 구체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들 미흡한 부분들은 차후의 연구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지고 있다.

<표 7-3> 외교안보통일 추진전략과 시기별 실천방안

국가비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외교안보의 비전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외교안보통일 전략목표	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구축 ② 협력 네트워크 외교 확대 ③ 포괄적 실리외교 지향 ④ 미래지향적 선진안보체제 구축				
전략의 기본방향	단기: 4대 전략목표 견지 중장기: G7 진입과 통일 달성				
분야별 추진전략	외교		안보	통일	
	협력 네트워크 외교	포괄적 실리외교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강화 -주요국(일·중·러) 관계 강화 -아시아·글로벌차원의 네트워크적 접근 및 맞춤형 양자관계 추진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FTA체결 다변화 -기여외교 확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지원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역할배분과 협력체계 정비	-선진 군사능력 확충 -국방경영 효율화 -대외군사협력 확대 -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 -그랜드 바겐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의 발전·조화	
시기별 실천 방안	단기 (2011~12년)	-한·미동맹 발전기 반 공고화 -주요국 교류확대와 내실화 -한·미·일, 한·중·일 협력을 위한 정상외교 -범아시아 대상 정상외교 강화 및 지역 기여 강화 -EU와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글로벌 차원의 양자관계 수립 및 민간교류 활성화	-종합적 에너지 외교정책 수립과 맞춤형 외교 -다차원적·한국적 개념에 부합한 참여 발굴과 역량 증진 체계 구축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추진 -효율적인 FTA 이행 -ODA와 연계 전략 -재외동포 지원외교의 중점 외교교과제 선정	-북한의 비대칭 안보위협에 대한 역지력 및 대응능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 준비 -유사조직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과 업무효율 제고; 민간경영 방식, 민간위탁 확대와 민·군 네트워크 조성 및 확대 -협동성 보완 및 강화책 마련 -한국군의 기능별 전문화 및 세분화 방안 고려	-상생·공영의 국민적 화합 -통일대비 내부역량 강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 마련 -평화공동체 건설 추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주변국 협력 확보

시기 별 실천 방안	중기 (2013~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내실있는 구현 -주요국 경협, 국재공조 확대 및 외교관계 격상 추진 -동북아 정상외교 지속 및 인적·경제적 협력 확대 -범아시아 관여 및 기여 확대 -글로벌 차원의 맞춤형 양자관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기업의 대형화 및 국제적 기여에 대한 대국민 지지 기반 공고화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체결 -전문 지역외교관 양성 -재외동포 업무의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군의 독자적 전시작전 통제력 배양과 독자적 전략개념 개발 -지속적 군사혁신을 위한 체계적·전략적 로드맵 제시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 전략을 위한 조건 마련 -에너지·자원 보유국들과 군사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교육 대상 확대, 제도 재정비 -핵문제 해결 완료 -평화공동체 건설 -경제공동체 추진 -동북아 안보협력체 제 추진
	장기 (2018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포괄적 협력동맹 완성 -주요국 관계격상에 따른 다면적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활성화 -범아시아 협력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차원의 각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네트워크 지식국가 및 기여외교의 확립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 -다자간 무역자유화 추진 -통일한국의 국가브랜드 교양 및 한민족 정체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중기 차원에서 추진된 선진 안보체제 구축 노력 평가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군사통합 준비 -통일한국의 군사력 발전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기반 마련 -경제공동체 건설 -민족공동체(남북연합) 형성 -동북아 평화변영체제 구축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승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 경기개발연구원.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09.
- 공제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년도 정세 평가와 2010년도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 국방대학교.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국방대학교, 2009.
- 국방부. 『200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9.
- _____.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 서울: 국방부, 2009.
- _____.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0-2024』. 서울: 국방부, 2009.
-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 서울: 오름, 2000.
- 김우상. 『신한국 책략 II: 동아시아 국제관계』. 서울: 나남출판사, 2007.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 김정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태영.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평양: 평양출판사, 2001.
- 김한성 외.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_____.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_____.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도현재. 『21세기 에너지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방안』.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 _____. 『LNG 시장상황 분석 및 도입정책 연구』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 마이클 클레어 저. 김태유·허은영 역. 『자원의 지배』 서울: 세종연구원, 2002.
- 문대근. 『한반도통일과 중국』. 서울: 늘봄, 2009.
- 박영호 외. 『남북연합 하에서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박종철 외. 『한국의 동북아시아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 서울: 오름, 2006.
- 박형일·이영진. 『세계 에너지·자원 현황 및 최근 동향』 서울: 산업자원부, 2006.
-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_____.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파주: 나남출판사, 2006.
- _____.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손민중 역. 『2020 세계경제의 라이벌: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중국·인도·일본의 미래전략』. 서울: 랜덤하우스, 2010.
- 송승중.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서울: 연경문화사, 2006.
-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3.
- 얀 멜리센(Jan Melissen) 저. 박선영 옮김, 『신공공외교: 국제관계와 소프트 파워』. 서울: 인간사랑, 2008.
- 엄국현·윤금철.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평양: 평양출판사, 2006.
- 여인곤.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외교통상부 유럽지역협력과. 『ASEM 길라잡이』. 서울: 외교통상부, 2008.
- 외교통상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한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 서울: 외교통상부, 2009.
- 외무부. 『러시아연방 개황』. 서울: 외무부, 1995.
- 윤성하 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진출 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윤태영.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서울: 인간사랑, 2005.
- 이민룡. 『에너지위기의 정치생태학』 서울: 민음각, 2006.
-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4.

- 이종무·최철영·박정란.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장 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 전성훈.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_____. 『북한의 WMD 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 정우진.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 조용범·박현채 감수. 『경제학사전』. 서울: 풀빛, 1988.
- 주동주·김학기·이진면. 『고유가시대의 대중동 산업협력 전략: FTA와 플랜트 수출을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2006.
-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서울: 청와대, 2009.
- 최낙균 외.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_____.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카스텔, 마누엘 저. 김목한 외 역.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3.
-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0』. 서울: 통일교육원, 2010.
- _____. 『통일문제 이해 2010』. 서울: 통일교육원, 2010.
- 통일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노력』.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2008.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2-2003』.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_____.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통일원.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원, 1989.
- _____.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5.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20년사』.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7.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09』.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 한재완. 『2010년 상반기 남북교역·북중교역 동향 비교』. 서울: 한국무역협회,

2010.

합동참모대학 국제평화활동센터. 『평화유지활동: UN PKO 종합지침서』. 서울: 합동참모대학, 2005.

허문영. 『6·15 공동선언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5.

_____. 『북한의 대미국정책 변화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_____. 『북한의 핵개발계획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대미협상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75.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Verification,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2010.

Amy Chua. *Day of Empire: How Hyperpowers Rise to Global Dominance - And Why They Fail*. New York: Doubleday, 2007.

Andrew Scobell and John Sanford.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Pyongyang's Conventional Forc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April 2007.

Anne-Marie Slaughter. *et al., Strategic Leadership: Framework for a 21st Century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8.

Anthony Cordesman. *Proliferation in the "Axis of Evil": North Korea, Iran, and Iraq*.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2.

Armitage, Richard, and Joseph Nye,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CSIS, 2007.

Campbell, Kurt M, Nirav Patel, and Vikram J. Singh, *The Power of*

- Balance: America in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8.
- Campbell, Kurt, et al. *Going Global: The Future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Washington, DC: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2009.
- Charles A. Kupchan. *The End of the American Era: U.S. Foreign Policy and the Geopolitics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Alfred A. Knopf, 2002.
- Cooper, Andrew F., 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1993.
- Denoon, David B. H., 박 안토니오 역.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부상: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의 질서 재편』.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 Department of the Army. FM 100-23 Peace Operations. Washington, D.C.: USGPO, 1994.
- Deutsch, Karl W.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Evans, Gareth. *Cooperating for peace :the global agenda for the 1990s and beyond.* St Leonards: Allen &Unwin, 1993.
- Flake, L. Gordon, and Park Ro-byug, *Understanding New Political Realities in Seoul: Working Toward a Common Approach to Strengthen U.S.-Korean Relations.* Washington, DC: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2008.
- Grewal, David Singh.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8.
- Hirschman, Albert O.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Holbraad, Carsten.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acMillan Press, 1984.

-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20*. Washington, D.C.: USDoD, 2000.
- Joseph S. Nye Jr.,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Katzenstein, Peter J.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Kauhman, Daniel J., Jeffrey S. McKittrick, Thomas J. Leney(eds.), *U.S. National Security: A Framework for Analysis*. Lexington: D.C. Health and Company, 1985.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Khanna, Parag. *The Second World: Empires and Influence in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Random House, 2008.
- Kindleberger, Charles P.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 Kurt M. Campbell, Nirav Patel, Vikram J. Singh, *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Asia*.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8.
- Lieven, Anatol, and John Hulsman. *Ethical Realism: A Vision for America's Role in the World*. New York, NY: Pantheon Books, 2006.
- Managing Global Insecurity, *A Plan for Action*. New York, NY: MGI, 2008.
- Modelski, George.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7.
- Mohamed Elbaradei, *The Challenges Facing Nonproliferatio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4.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박 안토니오 역. 『변모된 세계: 글로벌 트렌드 2025』.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9.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NIC, 2008.
-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0.
-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0.
-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Nye, Joseph, 홍수원 역. 『제국의 패러독스』. 서울: 세종연구원, 2002.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c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 Patrick M. Cronin (ed.), *2015: Power and Progres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6.
-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06.
-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0.
- Slaughter, Anne-Marie, et al. *Strategic Leadership: Framework for a 21st Century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5.
- Smith, Gayle E. *In Search of Sustainable Security: Linking 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and Collective Security to Protect America and Our World*. Washington, DC: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08.
-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A/55/305-S/2000/809*』. Brahimi Report, 2000.
-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2008.
- Vincent, R. J. *Non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74.

William E. Odom and Robert Dujarric, *America's Inadvertent Empi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Zakaria, Fareed.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NY: W. W. Norton, 2008.

孫 茹. 『朝核問題:地區合作進程研究』. 北京: 時事出版社, 2009.

外務省. 『外交青書』. 東京: 外務省, 2008.

張蘊齡. 『中國與周邊國家:构建新型伙伴關係』.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崔志應. 『朝鮮半島』. 上海: 同濟大學出版社, 2009.

2. 논문

강선주. “신정부의 기여 외교: 공적개발원조의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 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_____. “중동 페트로달러의 국제화 동향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강원택. “정치의식과 대북정책.”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 논문, 2010.9.7.

고성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수직적 인식을 넘어 수평적 인식으로의 발전 전망.” 『국가전략』. 12권 4호, 2006.

고성윤.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미래구상.”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 전문연구시리즈, 서울: 국방연구원, 2009-3.

고재남. “러시아 신정부와 협력강화방안.”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세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과제(1)』.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_____. “이명박 대통령의 對중앙아 2개국 정상외교의 성과 및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_____. “한·중아 2개국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정세와 정책』. 2009년 6월

- 호, 2009.
- 길병옥. “국가비상사태의 효율적 대비를 위한 국가위기대응법 제정방안.” 『2010년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발표자료』, 2010.
-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외교.” 『JPI 정책포럼』,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0.
- 김기정·천자현. “중국 자원외교의 다자주의와 양자주의: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자원외교 비교,”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2009.
- 김득갑. “한국의 자원 확보 전략: 원유를 중심으로.” 『CEO Information』, 651권, 2008.
- 김민석. “미사일기술통제제도(MTCR)와 한국의 입장.” 『한반도군비통제』, 14집, 1994.
- 김상배.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8권 4호, 2008.
- _____.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 김성철.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원칙과 과제.” 『세종정책연구』, 제6권 1호, 2010.
- 김성한. “한미동맹의 현황과 미래비전,” 『전략연구』, 통권 제48호, 2010.
- 김애경. “중국의 대외정체성 인식 변화: 제1, 2차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 변화 분석을 사례로.” 『국가전략』, 제10권, 4호, 2004.
- 김열수. “탈냉전 후 유엔 안보리의 위상변화: 군사력 사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2008.
- 김영재.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권 1호, 2000.
- 김영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운용 조건.” 이상현 편. 『한미동맹 로드맵: 비전·쟁점·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2008.
- 김장권 외. “통일을 향한 정치체제의 개혁과 재편: 분권주의 통일 모델의 모색.” 『한국진흥재단』(대학부설중점연구소 지원과제 - 통일 한국의 사회·정치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4세부과제 결과보고서, 1999.
- 김재관. “중국 신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대북정책과 남북통일관을 중심

- 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2호, 2005.
- 김정기. “중국어와 일본의 에너지자원 정책과 에너지 자원외교: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2009.
- 김준식. “국방운영 선진화,” 『국방발전 심포지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 김창수. “아시아태평양,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인가.” 김재두 외. 『2025년 미래대예측』.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 김치욱. “글로벌 스탠다드의 형성과 미국의 네트워크 권력: 국제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2010.
- 김현진. “가속화되는 석유의 정치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전략의 필요성.” 『석유협회보』, 2004.
- _____. “국가에너지 전략의 시대.” 『CEO Information』 569권. 삼성경제연구소, 2006.
- 김형기. “이벤트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탈냉전기 북한과 주변국과의 분쟁-협력 관계, 1990~2007.” 『비교민주주의연구』, 6집 1호, 2010.
- 김흥기. “한국의 대 동남아 주요국과의 에너지 외교: 에너지 안보차원의 현황과 전망,” 『東西研究』, 제21권 제1호, 2009.
- 김홍규. “미·중 전략: 경제대화 분석: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 _____. “북경 올림픽이후 중국 외교와 한반도정책.”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 노 훈.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력 발전.” 『국방정책: 이명박 정부 2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 국방발전 심포지엄 발표자료, 2010.
- _____.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력 발전,” 『국방발전 심포지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 ASEAN+3와 EAS의 관계정립 및 우리의 대응방안” 2008년도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
- 마상윤.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미동맹: 현실주의 역외균형론을 넘어서.” 『국가전략』, 16권 2호, 2010.
- 박변순. “동아시아 역내 수출 증기와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122호』.

-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 _____. “한·중·일의 對아세안 수출성과 『SERI 경제포커스 제122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 박병광. “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인도·파키스탄·한국 사례의 비교와 시사점.” 『외교안보연구』. 제6권 제1호, 2010.
- 박선민. “한-인도 교역 10년의 평가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Trade Focus』. Vol.9, No.22, 2010.
- 박순성.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북한 경제 변화.” 『북한경제논총』 통권 제9호, 2003.
- 박종철. “대북포용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의 비교,”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박창원·류지철.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제3호, 2005.
- 박형중.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변화 추동요인과 전개과정.” 전북지역통일교육센터 발표논문, 2009.9.17.
- 배궁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제11차 ASEAN+3 및 제3차 EAS결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7.
- 배정호 외.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Online series CO 10-15, 2010.5.18.
- 배정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조직과 운영.” 『국방연구』. 47권 1호, 2004.
- 백광일·남창희·이수형. “동북아 비대칭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2호, 2003.
- 변창구. “동남아시아 안보공동체로서의 ASEAN 전략과 과제.” 『정치·정보 연구』. 제12권 1호, 2009.
- 블라드렌 마티노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01.6.13.
- 산업연구원. “한-인도 CEPA 체결이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KIET 산업경제정보』. 제450호, 2009.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 학술심포지움 논문, 2010.9.7.
- 손열·이승주·전재성·조홍식. 『신세계질서의 구축과 한국의 G20 전략』, EAI Special Report 2010.
-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 신창민.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서울: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2010.9.1.
- 야쿠보프스키. 『러시아-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점과 전망』.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제106차 학술세미나, 1995.5.3.
- 여운기.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안보정책.” 외교통상부 편, 『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안보정책과, 2002.
- 원동욱. “중국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한중간 에너지협력게임.”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 유석진. “통화금융협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성남: 세종연구소, 2006.
- 유종하. “새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정책.” 『VIP REPORT』.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8.1.
- 유진숙. “한러 정상회담과 에너지외교 로드맵의 현실성.” 『KNSI 현안진단』. 제129호 (온라인). 2010년 6월 30일.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6863&k=3&c=6>>
- 유호근. “International Politics of ODA.” 『ODA(공적개발원조), 공공외교, 한국의 21세기 국가전략』. 한국세계지역학회. 국제학술회의, 2010년 9월 30일.
- 윤영미. “고유가 시대 에너지 위기 대응 대안과 과제.” 『군사저널』. 제42호, 2008.
- _____.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한국의 에너지 외교에 대한 고찰.” 『東西研究』. 제20권 제2호, 2008.
- _____. “탈냉전기 카스피해 유전을 둘러싼 국제 갈등체제의 쟁점.” 『사회과학연구』. 제13호, 2005.
- 이달석. “신자원민족주의의 현상과 영향.” 『KEEI ISSUE PAPER』 Vol. 1. No. 6, 2007.

- 이대우. “이명박 정부 신아시아외교구상.” 『정세와 정책』. 2009년 4월호, 2009.
- 이동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중국학연구』. 제45집, 2008.
- 이상신. “천안함과 대외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 학술심포지움 논문, 2010.9.7.
- 이상현.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과제.” 이각범 외.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9.
- 이 석. “통일의 경제적 문제: 개념과 시각.” 『KDI북한경제리뷰』. 제12권, 8호, 2010.
- 이선진.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제주평화연구원 편.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09.
- 이선호. “한국의 국방백서,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백서의 실상을 진단한다.” 『군사저널』. 1993. 5.
- 이수형·윤태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강태훈 외.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국제관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와 안보 패러다임.”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서울: 인간사랑, 2005.
- _____.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 _____.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 _____.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유럽 역내외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제53권 1호, 2010.
- _____. “비전통적 안보개념: 등장배경, 유형 및 속성.” 함택영·박영준 편.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서울: 사회평론사, 2010.
- _____. “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2권 제1호, 2009.
- _____. “중추적 중견국가론과 참여정부의 실용적 균형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1호, 2008.

- _____. “한미 전략동맹의 현황과 과제.” 『한반도 포커스』. No. 8, 2010.
- 이안재. “한류열풍의 해부.” 『평화포럼』21.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서울: 21세기 평화재단연구소, 2005.
- 이애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JPI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0.7.
- 이영중.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북한의 통일 전선전술: 실태와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0.8.25.
- 이재승.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 협력: 하위정치 이슈에 대한 상위정치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제14권 1호, 2005.
- 이재현. “대통령 베트남, 캄보디아 순방과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평가와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 _____.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 이준범. “러시아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정책의 국제정치경제.” 『에너지경제연구』. 2004.
- 이진영. “탈북자 기획망명 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정세와 정책』. 72호, 2002.
- 이현경.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 『통일과 평화』, 2집1호, 2010.
- 임강택.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력 추진 방안.”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임혁백. “평화통일정책과 남남갈등의 극복.”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 전병곤. “김정일 정권 향방에 따른 중국의 선택.”(Online series CO 08-31, 2008.9.18).
- _____. “북핵문제의 해결방향: 중국의 입장.” 『2009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09.12.12.
- _____. “천안함 침몰 사태와 중국 외교.”(Online series CO 10-21, 2010.5.31).
- _____. “중국의 북핵문제 인식과 중북관계의 변화.” 『중국학연구』. 제35집, 2006.
-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권 2호, 2004.
- 전혜원. “리스본 조약 이후 EU 전망: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

- 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0.
- 정상률. “미국의 ‘대중동구상’에 대한 이집트의 대응 외교정책.” 『중동연구』. 제25권 2호, 2006.
- _____. “중동 석유의 정치경제와 한국의 대중동 자원외교.” 『東西研究』. 제20권 제2호, 2008.
- 정원영. “전시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한 동원제도 발전방안.” 『2010년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발표자료』, 2010. 7. 29.
- 정인교. “ASEAN-China Economics Relations.”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23(1), May 2009.
- 조 윤. “우리나라 에너지외교의 바람직한 방향.” 『외교』. 제86호, 2008.
-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 조운영. “동아시아 안보와 제도주의: 안보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발전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2005.
- 조한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서병철 편저. 『분단 극복을 위한 초석 -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 서울: 도서출판 매봉, 2003.
- 진창수.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한일관계.” 『외교안보연구』. 제5권, 2005.
- 최명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JPI정책포럼』, 2010.
- 최원기. “코펜하겐 협상 이후 국제 기후변화 논의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 최종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구상.” 『국가전략』. 제12권 1호, 2006.
- 최지영. “주권과 인권: 인권담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 연구.” 『중소연구』. 28권 4호, 2005.
-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통일과 선진화 국민외식 조사 및 2010 국가선진화지수 발표·심포지엄』,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0.9.16).
- 허문영. “남북한의 평화전략.” 김학성 외. 『한반도 평화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북한의 통일정책.”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 _____.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방안.” 김규륜 외,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체계 및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_____. “2·13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쟁점 및 추진방향.”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_____. “6자회담과 남북한관계 전망.”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2005년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5.11.24.
- _____.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변천사.”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4호, 1999.
- _____. “북한의 대남 및 통일정책.”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 _____. “북핵문제 본질과 국제공조론 보완방안.” 『국제문제연구』. 2008 여름호. 허태희. “에너지 위기의 가능성과 대응방향.” 2008년 한국세계지역학회 추계학술회, 2008.10.17.
- 홍용표.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4호, 2002.
- 홍우택·이장원. “중국의 문화적 팽창주의: 동북아 질서에 대한 중국의 의도 분석.” 『국제정치논총』 48집 2호, 2008.
- 황규득. “중국과 미국의 대아프리카 에너지안보 전략과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A. M. Denmark and J. Mulvenon eds., “*Contested Commons: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in a Multipolar World*”,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0.

Caporaso, James A.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 John Gerard Ruggie(ed.). *Multilateralism Matt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Chanlett-Avery, Emma. “Congress and US Polic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Recent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 CRS Report for Congress, October 22, 2008.
- Chung, Michael H,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 Cross-Cultural Perspective," U.S. Army War College, Carlisle Barracks, PA 17013-5050. 18 March 2009.
- Clinton, Hillary Rodham. "Leading Through Civilian Power: Redefining American Diplomacy and Development." *Foreign Affairs*. Vol. 89, No. 6, 2010.
- CNS Featured Stories. "The North Korean Rocket Launch: International Reactions and Implications." April 27, 2009.
- Cohen, Roberta. "Raising Human Rights Concerns with N. Korea." Interview,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y 23, 2009.
- Daalder, Ivo H, and Robert Kagan, "America and the Use of Force: Sources of Legitimacy," Derek Chollet, Tod Lindberg, and David Shorr, eds., *Bridging the Foreign Policy Divide*. New York, NY: Routledge, 2008.
-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U.S.: A Marriage of Convenience*." Brookings Institution. January 6, 2009.
- Dewitt, David. "Common, 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Security." *The Pacific Review*, Vol. 7, No. 1. 1994.
- Dobbie, Charles. "A Concept for Post-Cold War Peacekeeping." *Survival* Vol. 36, No. 3. 1994.
- Farrell, Theo.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Peace Operations." in John Baylis, James Wirtz, Eliot Cohen, Colin S. Gray(eds.).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Gates, Robert M.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 88, No. 1 (January/February 2009).
- Goldstein, Joshua S.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No. 2, 1992.
- Gong Keyu.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ese Policy."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8, No.1, 2009.
- Grewal, David Singh. "Network Power and Global Standardization: The Controversy over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Christian Barry and Thomas W. Pogge, eds. *Global Institutions and Responsibilities*. Malden, MA: Blackwell, 2005.
- Haass, Richard N.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May/June, 2008.
- Hurrell, Andrew. "Hegemony, liberalism and global order: what space for would-be great powers." *International Affairs*, Vol. 82, No. 1. 2006.
- I. Wallerstein, "The Eagle Has Crashed Landed" *Foreign Policy* July-August 2002.
- INSS and IDA. "Moving the U.S.-ROK Alliance into the 21st Century." *INSS Special Report*.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September 2007). (<http://www.ndu.edu/inss/Research/SRsep07.pdf>).
- John Wilson Lewis and Hua Di. "Chin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Technologies, Strategies, Goal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2. Fall 1992.
- Joshua E. Keating, "How Do We Know That China's Economy Is Really Bigger Than Japan's?" *Foreign Policy* Aug. 16, 2010.
- Kamp, Karl-Heinz. "Global Partnership? A New Conflict Within NATO?" *Analysen und Argumente der Konrad-Adenauer-Stiftung* Nr. 29, 2006.
- Kawai, Masahiro. EFTA or CEPEA: Which Way Forward? *ASEAN Economic Bulletin*, 25(2), 2008.
- Keohane, Robert. "Ideas Part-Way Dow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6. No. 1, 2000.
- Keohane, Robert.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XIV-4. 1990.

- Kounadze, G. F.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외교』, 제31호, 1994.
- Kurt Campbell, "Concluding Observations," in Campbell and Darsie, eds., *China's March o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2007.
- Lake, David A. "Anarchy, Hierarchy, and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No. 1, 1996.
- Layne, Christopher. "The Waning of U.S. Hegemony-Myth or Real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1, 2009.
- Leander, Anna. "The Power to Construct International Security: On the Significanc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3. No. 3, June. 2005.
- Lebow, Richard Ned. "Power, Persuasion and Justic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3. No. 3. June. 2005.
- Lee, Jae-Seung. "The EU's Green Energy Strategy: The Policy Response to Renewable Energy and Climate Change." 『국제관계연구』 제15권 1호, 통권 제28호, 2010.
- Mandelbaum, Michael. "Is Major War Obsolete?." *Survival*, Vol. 40, No. 4. 1999.
- Mattern, Janice Bially. "Why 'Soft Power' Isn't So Soft: Representational Force and the Sociolinguistic Construction of Attraction in World Politic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3. No. 3, June. 2005.
- Metz, Steven. "Strategic Asymmetry."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01.
- Michael Pettis, "Is China Turning Japanese?" *Foreign Policy* Aug. 19, 2010.
- Moiseyev, L. "Russian Assessment and Polic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eninsula &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held by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25~26, November 1997.

- Morton Abramowitz and Stephen Bosworth, "Adjusting to the New Asia,"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3.
- Ozkan, Mehmet. "A New Approach to Global Security: Pivotal Middle Powers and Global Politics." *Perceptions*, Vol. 11, No. 1. 2006.
- Page, Robert A.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 Paul, T. V..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 Robert D. Kaplan,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How Far Can Beijing Reach on Land and at Sea?" *Foreign Affairs* May/June 2010.
- Ross, Robert S. "The Geography of the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1999.
- Rugge, John Gerard.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John Gerard Rugge(ed.). *Multilateralism Matt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Sato, Yukio. "The Evolution of Japan's Security Policy." *Adelphi Paper*. No. 178, 1982.
- Shapiro, Jeremy and Lynn E. Davis.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Lynn E. Davis and Jeremy Shapiro(eds.). *The U.S.-Army and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Santa Monica: RAND, 2003.
- Slaughter, Anne-Marie. "America's Edge: Power in the Networked Century." *Foreign Affairs*. Vol. 88, No. 1, January/February 2009.
- Snyder, Scott. "Pursuing a Comprehensive Vision for the U.S.-South Korea Allianc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009. (http://www.csis.org/media/csis/pubs/0904_09_snyder_pursuingcompvision_web.pdf).
- Statement of the Security Council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s and*

- Govern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23500, January 31, 1992.
- US Defense Science Board, “DoD Responses to Transnational Threats.” *Vol. I Final Report*. 1997.
- US-ROK Strategic Forum, “The Search for a Common Strategic Vision: Charting the Future of the US-ROK Security Partnership,”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Online*, 08-018A(March 5th, 2008).
- Zheng Bijian.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5.
- 龔克瑜. “國在朝核問題上的國家利益,作用和前瞻性思考.” 『國際觀察』, 2008年 第5期.
- 門洪華. “東北亞安全困境及其戰略應對.” 『現代國際關係』, 2008年 第8期.
- 張璉瑰. “朝鮮半島的統一與中國.” 『當代亞太』, 2004年 第5期.
- 田邊誠. “日朝新時代の幕あげ, アジ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に.” 『月刊社會黨』, 1990年 12月號.
- 陳龍山. “朝鮮半島統一問題略論.” 『東北亞研究』, 1999年 第2期.

3. 기타자료

- 『국민일보』.
- 『국방일보』.
- 『내일신문』.
- 『데일리 NK』.
- 『동아일보』.
- 『로동신문』.
- 『매일경제』.
- 『모스크바 방송』.
- 『문화일보』.
- 『미디어오늘』.

- 『세계일보』.
- 『신동아』.
- 『연합뉴스』.
- 『월간중앙』.
- 『자유아시아방송(RFA)』.
- 『조선일보』.
-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
- 『중앙일보』.
- 『평양방송』.
- 『한겨레신문』.
- 『한국일보』.
- 『헤럴드 경제』.
- 『New York Times』.
- 『Voice of America』.
- 『讀賣新聞』.
- 『人民日報』.
- 『朝日新聞』.

<www.fas.org>

<www.fta.go.kr/new/ftakorea/borderpsd_read.asp>.

<www.unirussia.com>

<www.chinanews.com.cn>

<www.fmprc.gov.cn>

<www.fta.go.kr/new/ftakorea/borderpsd_read.asp>.

<www.In.mid.ru>

<www.mid.ru>

<www.mnd.go.kr>

<www.mofat.go.kr>

<www.president.go.kr>

<www.ruvr.ru>

“한·EU FTA 가서명.”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9년 10월 15일.

“한-인도 CEPA 협정 정식 서명.”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9년 8월 6일.
국회 개원연설, 2008년 7월 11일.

모스크바 「루스키 미르 재단」 의 Georgy Toloraya 박사와의 면담. 2009년 4월
13일.

외교통상부. “대아프리카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 2008. 2. 19 ppt 자료.

_____. 『경제살리기와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한 2009년도 업무계획』.
2008.12.31.

_____.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2010년 업무계획』. 2009.12.31.

_____.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외교 - 2008년도 활동계획 -』. 2008.3.11.

_____. 『외교백서 2010』. 서울: 외교통상부, 2010.

_____. 『주요국 에너지 현황 및 에너지 외교』. 서울: 외교통상부, 2005.

_____.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서울: 외교통상부, 2006.

_____.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서울: 외교통상부, 2004.

_____. 『한·ASEAN FTA의 주요내용』. 서울: 외교통상부, 2007.

_____. 『한·EFTA FTA의 주요내용』. 서울: 외교통상부, 2006.

제54회 현충일 추념사, 2009년 6월 6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0년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2010.8.15.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의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범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합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태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북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유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영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근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룡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운,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 타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